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및 자활정책네트워크 자 료 집

일시 : 2023. 10. 20 (금)

장소 : 1부-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2B호,
2부-제주국제컨벤션센터 302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 자활정책 네트워크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

일시 2023. 10. 20.(금) 15:45 ~ 19:00

장소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1부: 402B호 / 2부: 302호

문의 02-3415-6938



1부. 산학세션

주제발표

- 좌장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1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단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함선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2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방안'

- 안미현(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토론

- 배지영(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 이소정(남서울대학교 교수)

2부. 라운드 테이블

발표

'제3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 박향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 이현수(대전광역시자활센터장)

- 이문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의견공유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정책연구자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및 자활정책네트워크』 타임테이블

10월 20일(금)

구분	일시	소요시간 (분)	내용
1부.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 / 402B호			
출석	15:00~ 15:40	'40	▶접수데스크 출석 체크, 자료집 수령
사전 안내	15:40~ 15:45	'5	▶장내안내
1부 시작	15:45~ 15:55	'10	▶1부 시작 ▶인사말(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패널 - 좌장: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남진열 교수 - 발표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안미현 실장 - 토론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 남서울대학교 이소정 교수
주제 발표1	15:55~ 16:15	'20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단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부연구위원)
주제 발표2	16:15~ 16:35	'20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방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안미현 자활정책실장)
토론1	16:35~ 16:45	'1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
토론2	16:45~ 16:55	'10	▶남서울대학교 이소정 교수
질의 응답	16:55~ 17:05	'10	▶질의응답
1부 마무리	17:05~ 17:15	'10	▶1부 마무리 및 2부 안내
이동	17:15~ 17:25	'10	▶장소이동(402B호->302호)
2부. 라운드 테이블: 제3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 302호			
2부 시작	17:30~ 17:40	'10	▶2부 시작
발표1	17:40~ 18:00	'2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향희 일자리사업본부장)
발표2	18:00~ 18:20	'20	▶광역자활센터 전략 (대전광역자활센터 이현수 센터장)
발표3	18:20~ 18:40	'20	▶지역자활센터 전략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
토론	18:40~ 19:10	'30	▶토론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정책연구자 등 자유 의견
2부 마무리	19:10~	-	▶2부 마무리 및 식당 안내

목 차

I.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발 표 1. 개인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및 자활사업단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함선유) -----	3
발 표 2.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방안(안미현) -----	17
토 론 1.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시행방안(배지영) -----	31
토 론 2.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을 위하여(이소정) -----	33

II. 자활정책 네트워크

'제3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발 표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략(박향희) -----	39
발 표 2. 광역자활센터 전략(이현수) -----	66
발 표 3. 지역자활센터 전략(이문수) -----	75

1부.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개인맞춤형 자립지원 강화와 자활사업단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023.10.20.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선유

※ 본 발표문은 함선유 외(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수립 연구」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 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용 시 본 보고서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1 연구배경



01 자활사업개요

- 자활급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복지연계제도(김수영, 2012)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활사업은 지역의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시작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제도화되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취지에서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한편, 빈곤가구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음.
 - 즉,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정책요소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 자활급여는 제도화 이래로 급여의 내용이나 대상자 등이 변화해왔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제도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제도의 변동 속에서 외부의 환경도 변화하였음.
 - 제도화 이후 지역자활센터가 확장 운영되었으며,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추진(2004년), 중앙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설치(2008년), 희망키움통장 사업 실시(2010년),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노동부 이관(2015년), 자활급여 압류 방지 통장 구축(2018년)등이 이뤄져 왔음.

01 자활사업 개요

- 자활급여의 주요 내용
 - 자활급여는 크게 ① 근로능력 배양과 사례관리, 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복지서비스와 직접 일자리 제공, ② 자활기업 지원과 ③ 자산형성사업으로 구성됨.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자활역량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게이트웨이 사례관리와 자활사례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와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 지원을 받도록 함.
 -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을 거쳐 창업한 기업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평가 결과	사업		실시기관	기준
80점 이상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80점 미만 (근로능력 강화 대상자)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45점 미만 (근로의욕 증진 대상자)		근로유지형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 자활사업안내. p.36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1 수급특성별 참여자 현황

- 행복e음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말 기준 자활근로 참여자의 수급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이행한 사람들의 다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의무가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로 나타남.
 - 전체 자활근로 참여자 대비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폭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다소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 조건부 수급자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많음.
 - 근로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일반수급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명, %)

구분	단위	시점(연월)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전체	명	33,017	35,765	39,695	40,852	39,153
	%	(100)	(100)	(100)	(100)	(100)
일반수급자	명	6,306	7,840	11,267	11,363	12,202
	%	(19.10)	(21.92)	(28.38)	(27.82)	(31.16)
조건부수급자	명	22,887	22,994	22,878	24,015	21,611
	%	(69.32)	(64.29)	(57.63)	(58.79)	(55.20)
자활특례가구	명	3,497	4,734	5,162	5,050	4,939
	%	(10.59)	(13.24)	(13.00)	(12.36)	(12.61)
차상위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	213	69	254	295	266
	%	(0.65)	(0.19)	(0.64)	(0.72)	(0.68)
시설수급자	명	114	128	134	129	135
	%	(0.35)	(0.36)	(0.34)	(0.32)	(0.34)

주: 1) 각 기중시점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가구와 가구원 정보 결함함. 이때, 결합 자료에서 기준연월, 가구 ID, 가구원 ID, 수급자격취득일이 동일한 사례는 중복사례로 간주하고 한 사례만 활용. 2) 자활 이행 상태가 '이행' 혹은 '자활사업 참여 종료'인 사람에 한해 분석. 자료: 함선유 외(2023) 표3-4: 행복e음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2 연령별 참여자 현황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18년 당시 25.8%에서 2021년 27.9%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영향과 자활근로사업의 일반수급자 참여 증가 등에 따른 요인으로 생각됨.

년도	총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018	31486	100.0	2214	7.0	2506	8.0	6898	21.9	11754	37.3	8114	25.8
2019	40588	100.0	3695	9.1	3407	8.4	8436	20.8	14884	36.7	10166	25.0
2020	47088	100.0	4525	9.6	3736	7.9	9397	20.0	16949	36.0	12481	26.5
2021	51913	100.0	4663	9.0	3964	7.6	10000	19.3	18806	36.2	14480	27.9

자료: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함선유 외(2023) 표3-6 참조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3 자활역량점수별 참여자 현황

- 자활역량점수가 45점 이상 80점 미만인 중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자활 참여자들의 비중이 가장 크고, 시간에 따라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인 고역량자의 비중이 2019년 큰 폭으로 늘어났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구분	단위	시점				
		201812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전체	명	34,091	36,485	40,159	41,263	39,462
	%	(100)	(100)	(100)	(100)	(100)
결측	명	9,067	7,224	6,614	6,732	8,906
	%	(26.60)	(19.80)	(16.47)	(16.31)	(22.57)
0점	명	137	81	10	79	36
	%	(0.40)	(0.22)	(0.02)	(0.19)	(0.09)
1점 이상 45점 미만	명	2,981	2,625	2,548	2,343	84
	%	(8.74)	(7.19)	(6.34)	(5.68)	(0.21)
45점 이상 80점 미만	명	19,721	20,867	24,444	25,438	23,879
	%	(57.85)	(57.19)	(60.87)	(61.65)	(60.51)
80점 이상	명	2,185	5,688	6,543	6,671	6,557
	%	(6.41)	(15.59)	(16.29)	(16.17)	(16.62)

(단위: 명, %)

주: 1) 각 기준시점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가 구와 가구원 정보 결합한, 이때, 결합 자료에서 기준연월, 가구 ID, 가구원 ID, 수급자격취득일이 동일한 사례는 중복사례로 간주하고 한 사례만 활용.

2) 자활 이행 상태가 '이행' 혹은 '자활사업 참여 종료'인 사람에 한해 분석.

자료: 함선유 외(2023), 표 3-9: 행복e음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4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근 성과

-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정체
 - 자활 참여자의 평균참여기간이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자활참여자의 정체 현상이 있음.
 - 이러한 정체 현상에 따라 신규 참여자가 희망하는 사업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게이트웨이에서 대기하는 현상, 자활기업의 경우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을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설립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 발생함.

년도	6개월이하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60개월	61개월이상 (5년이상)
2018	41.4	11.5	16.7	30.3	0.0	0.0
2019	46.3	13.1	13.8	10.5	16.4	0.0
2020	40.0	13.8	18.8	9.7	17.6	0.0
2021	38.0	12.2	17.4	13.3	13.4	5.7

자료: 함선유 외(2023). 표 3-26: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4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근 성과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도 25% 내외로 낮아진 뒤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내부적 요인으로 참여자의 연령 증가 등 기본 역량은 줄어드는 반면, 자활 급여 등이 인상됨에 따라 탈수급 유인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취·창업 등이 어려운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기준연월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2019년 12월	28.5	29.4
2020년 12월	24.7	26.0
2021년 12월	25.0	26.3
2022년 12월	22.7	24.3

자료: 함선유 외(2023). 표 3-27: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2023). 자활성공률(사업별) 현황.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과 평가

05 자활역량점수별 참여자 성과

- 자활역량점수별로 탈수급률에 차이를 보이는데, 자활역량점수가 높다고 해서 탈수급 성과가 크지는 않음.
 - 자활역량점수가 45점 이상 80점 미만인 집단에서 탈수급률이 높은 편임.
 - 자활역량점수에 적합한 자활사업단에 배정되면 탈수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음.

구분	단위	수급 유형					
		결측	0점	0점이상 45점미만	45점이상 80점미만	80점 이상	전체
전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명	38,543	343	10,581	114,349	27,644	191,460
탈수급자	명	814	3	322	3,470	329	4,938
	%	(2.11)	(0.87)	(3.04)	(3.03)	(1.19)	(2.58)
실질 탈수급자	명	565	2	232	2,431	197	3,427
	%	(1.47)	(0.58)	(2.19)	(2.13)	(0.71)	(1.79)
실질 탈수급까지 경과기간	개월	60.0	54.5	61.0	51.1	66.4	54.1

주: 1) 각 기준시점에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가 구와 가구원 정보 결합함. 이때, 결합 자료에서 기준연월, 가구 ID, 가구원 ID, 수급자격취득일이 동일한 사례는 중복사례로 간주하고 한 사례만 활용.
 2) 자활 이행 상태가 '이행' 혹은 '자활사업 참여 종료'인 사람에 한해 분석.
 3) 탈수급 일자가 자격 취득일보다 앞선 경우는 탈수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실질 탈수급은 탈수급 사유가 '소득(급여·사업)증가'나 '자활자립'인 경우가 해당.
 자료: 협선유 외(2023), 표 3-29 행복e음 원자료 활용 저자 작성

2.2 2차 기본계획 대응과 평가

01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 재설계

- (대응)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저하라는 측면에서 제2차 자활기본계획(2021~2023)에서는 탈수급이라는 단일한 자활의 목표에서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추가적인 자활목표를 설정함.
 - 이에 자활역량 미약자의 경우 기초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고, 대상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복력 강화 및 자립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 방향	주요 과제	세부과제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 재설계	자활준비형 기초역량 배양 지원	- 사회통합 관련지표 개발 - (가칭)자립지원전문서비스 전담 관리팀 확대 - 자립지원전문서비스 업무 표준화
	자립도전형 직무능력 제고 및 참여 대상 확대	- 자립유인 설계 및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청년, 자영업자, 긴급복지 등 신규 대상자 발굴 - 광역 특수 사업단 운영

- (평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자활준비형과 자립도전형으로 참여자를 재구조화하고 자활준비형의 경우 근로상태 유지와 자활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정서적 자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정서적 자활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자활사례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함('21 정서적 자활 촉진자 과정 개발).
 - 그러나 실질적으로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이러한 개인에 맞춘 자활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사회통합지표 등을 개발하였으나 이의 실질적인 활용은 이뤄지지 않음.

02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 (대응)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간 시스템 연계로 이력을 공유하고자 하였음. 또한 자활기업 또는 자활센터를 일경험 기관으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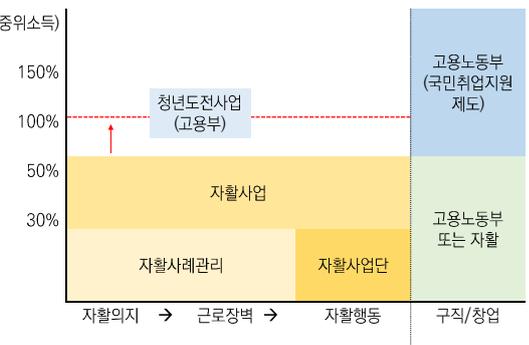
추진 방향	주요 과제	세부과제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자활사업 연계 - 제도간 시스템 연계로 이력 공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역할 강화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침 마련

- (평가) 현재까지는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간 연계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및 중단 이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교육 및 고용서비스 이력 정보 확인 불가함.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프로그램의 참여기관으로 자활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나, 자활기업의 역량 등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 확인함.

2.3 자활근로사업의 정책 과제 진단과 제안

01 욕구 기반의 자활사업 참여 기준 유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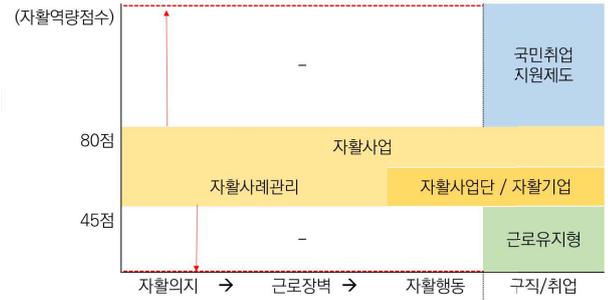
- 저활력·저역량자로 자활 사업 대상 확대 검토
 -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온 일자리 사업으로 상당수의 대상자가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저역량, 저활력 참여자임.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직접일 자리를 제공이라는 자활사업의 축적된 경험과 강점의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의 대상을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저역량 저활력자와 같이 욕구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일럿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상자 확대의 가능성과 성과를 타진해볼 수 있음.
 - 현재 자산형성사업의 경우 청년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였으며, 내일 키움 일자리 사업“에서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2.3 자활근로사업의 정책 과제 진단과 제안

02 개인별 자활과정을 고려한 연계 체계 정비

- 정서적 자활과정을 고려한 취업우선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서비스임. 구직의사가 없는 참여자의 경우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음.
 - 자활사업의 고용복지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노동시장으로 진입가능하도록 역량 또는 활력이 확보된 참여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 있음.
 -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역량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취업우선제도 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고 있으나, 구직의사가 높지 않고 유연성이 낮아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 고용서비스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의 참여 이력 연계



2.3 자활근로사업의 정책 과제 진단과 제안

03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평가 개편을 통한 역량 기반 사업단 배치

- 역량진단과 정서적 자활 수준을 포함하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서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로 나누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참여자 자활역량평가만으로 적절히 대상자를 분류하여 운영하기 어려움.
 - 이에 정서적 자활지표 등 자활의 과정적 지표를 반영한 역량진단과 노동시장 내 기술 및 생애주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에 기초한 맞춤형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활역량평가 체계를 개편할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여러 고용서비스와 실업을 오가는 회전문 현상 방지
-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역량 기반 사업단 배치
 - 자활역량평가와 사업단 배치가 연계되지 않아 자활역량평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인에 맞춘 자활경로를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자활역량평가 개편을 통하여 자활역량에 기반한 사업단 배치 또는 취업(고용서비스연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자활경로 간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 있음.
 - 개편된 자활역량점수에 따라, 자활사업을 비롯해 근로빈곤층의 욕구 및 현실에 부합하는 고용서비스 제공

04 개인 맞춤 자활사업 설계와 자활 목표 고도화

- 자립 역량이 있는 참여자에 대한 자활 인센티브 강화
 - 자립역량을 갖춘 사업단 참여자의 경우 자립성과금을 매월 지급하는 체계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자활사업 종결 시까지 적립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자립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 그 외에도 자활기업 창업 또는 자활 시 일정 기간 추가로 자활 특례를 유지하여 자활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자활 목표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
 - 개인에 맞춘 정서적 자활의 실현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활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활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개입이 지원되어야 함.
 - 자활사례관리를 지역자활센터의 기본 업무화하고,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인력을 배치해야 함. 또한 자활사례관리 시 사례관리의 이력이 추적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함.
 - 자활사례관리의 매뉴얼 및 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통하여 자활사례관리의 질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무 자료 축적이 필요함.

3.1 자활기업의 현황과 평가

01 자활기업의 수

- 자활기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설립 및 운영 주체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한 기업을 의미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이들 자활기업은 대부분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이며, 광역 자활기업은 두 개 지역 이상에서 참여한 경우, 전국 자활기업은 두 개 이상 광역단위에서 참여한 경우를 의미함.
- 2022년 기준 전국에 1,012개 자활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 중 전국자활기업은 4개소, 광역 자활기업은 41개소임.
 - 자활기업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2021년 997개소로 최저 수준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 1,012개소로 다시 늘어났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186	1,092	1,211	1,176	1,062	997	1,012
전국					3	3	4
광역					37	39	41
지역					1,022	955	967

자료: 함선유 외(2023), 표2-7: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3.1 자활기업의 현황과 평가

02 자활기업 창업 현황과 성과

- 자활기업의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자활 창업기업 수 감소가 있음. 2018년 당시 연간 자활 창업 기업 수는 120개 소 였으나, 2021년 76개소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84개소로 반등하였음.
 - 자활사업단 참여자의 고령화 등으로 자활기업 창업 역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자활 사업단의 상대적인 자활 급여는 높아지면서 자활기업 창업의 유인이 악화되었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활기업 창업 수	120	97	79	76	84

자료: 함선유 외(2023), 표2-8: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다만 자활기업의 수가 감소한 반면 자활기업의 2년 유지율은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냄.
 - 2022년 기준 설립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은 전체 87.3%이며 운영 중인 자활기업의 평균 유지기간도 2020년 6.5년에서 2022년 7.5년으로 증가하였음.

구분	2020	2021	2022
자활기업 2년 유지율(%)	63.92	76.29	87.34
평균 유지 기간(년)	6.53	7.06	7.48

자료: 함선유 외(2023), 표2-9: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3.1 자활기업의 현황과 평가

03 자활기업의 업종과 규모

- 자활기업의 업종은 청소, 음식점, 사회서비스 등의 자활기업의 수는 줄고, 배송·운전, 유통·판매(주로 편의점)이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냄.
 - 이러한 업종 정형화는 자활사업단 운영의 정형화와도 연결되어 있음. 자활기업 지원 방안으로 공공기관 우 선구매나 생산물 안내 배포 등의 전략이 있으나, 생산물 관련 업종의 경우 기업의 수는 많지 않음.
- 최근 지역자활기업의 규모는 감소하고 전국자활기업과 광역자활기업의 수가 일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
 - 자활기업 평균 참여자 수가 2022년 현재 10.52명이며 64.8%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2020년부터 최근 까지 자활기업당 참여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특히 10~29인 규모의 사업장이 줄어들었음.

구분	2020	2021	2022
평균참여자 수	14.05	11.32	10.52
5인 미만	67.42	65.5	64.82
5-9인	20.24	22.87	24.6
10-29인	9.04	8.12	7.11
30-99인	1.98	2.11	2.08
100인이상	1.32	1.4	1.38

자활기업의 종사자 수
자료: 함선유 외(2023), 표2-11: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3.1 자활기업의 현황과 평가

04 자활기업의 사업체 유형

-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달리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자활기업으로 인정됨. 2022년 현재 자활기업 중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474개소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법인 사업자 중에서 주식회사가 266개소였으며, 일반 협동조합은 144개소임.
 - 최근 개인사업자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업의 수는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창업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개인사업자임.
 - 개인사업자 중심의 자활기업은 기업의 회계 등 투명성에 제약이 있으며, 향후 규모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문제로 진척이 어려움.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비영리	법인사업자 - 영농조합	법인사업자 - 유한회사	법인사업자 - 합병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2018	65.38	0.96	2.88	12.5	2.88	15.38
2019	68.04	0	5.15	13.4	1.03	12.37
2020	56.79	0	0	23.46	6.17	13.58
2021	61.54	0	6.41	16.67	2.56	12.82
2022	52.38	2.38	8.33	15.48	8.33	13.10

창업 자활기업의 사업체 유형
자료: 함선유 외(2023), 표2-14: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3.2 2차 기본계획 대응과 평가

01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 (대응)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자활기업의 브랜드화 등을 모색함. 자활기업의 지원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추진 방향	주요 과제	세부과제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창업·성장 지원강화	- 마일스톤 방식 지원 - 규제완화 및 판로지원(공공사업 유치지원)
	성공적 기업 모델로서 광역·전국자활기업 육성	- 민-관 협력 기업 모델 - 자활기업 브랜드화
	자활기업 지원기반 강화	- 자활기업 인정·취소요건 명확화 - 자활기업 통계관리 강화 - 자활기금 관리모델 개편

- (평가) 자활기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며, 전국 자활기업이나 광역 자활기업의 확대는 더딘 상황임.
 - 자활기업의 규모화 등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되었으나 여전히 창업 기업의 절반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성장지원을 통한 기업의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공적 지원을 통하여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됨.

01 자활사업단 다양성 확보와 내실화

- 파일럿 사업단 등 새로운 사업단 시도에 대한 지원 확대
 - 자활사업단의 유형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참여자의 욕구에 따른 일 경험이 이뤄지는 데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이후 자활기업의 사업 유형과 성장 가능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침.
 - 파일럿 사업단 등 새로운 사업 부문에 사업단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그 외에도 시간제 사업단의 경우 고용형태의 측면으로 건강문제나 취업준비, 자녀양육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시간제 사업단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가 고려될 필요 있음.
- 선도적 자활사업단 브랜드 개발
 -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활사업단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전국 브랜드화를 통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예) 에코워싱, 더담아유
 -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기조로 자활사업단의 역할 확보를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광역사업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건 개선
 -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지속가능성과 자활 사업참여자의 다변화된 욕구 대응을 위하여 지역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은 광역사업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영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광역사업단의 사업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 해소가 필요함.

02 자활기업 내실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 자활기업의 개인사업자 점진적 폐지
 - 자활기업의 영세화와 성장 제약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나 전체 자활기업의 절반가량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어 컨설팅이나 지원받지 못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 창업 이후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현재 지원 중이기는 하나 이해관계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임.
 - 자활기업의 사회적 의미와 다양한 지원 및 투자를 고려할 때 자활기업 창업 당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창업하도록 하는 방향성 필요함.
- 자활기업 생산품의 판로 지원과 공공사업 유치 지원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하여 자활기업 생산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생산품으로 지정되었으나, 이의 판로지원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임.
 - 추후 우수생산품에 대한 홍보 확대를 통하여 판로지원이 필요하며 공공사업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함.
 -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공기관 구매 접근성 제고할 필요 있음.

01 자활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 강화

-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단 성과지표 개발 및 주기적 관리 강화
 - 통계의 연차별 관리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및 제도개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제도 성과 달성 및 추진과정에 관한 성과관리가 진행되어야 함.
- 자활기업시스템을 통한 자활기업 지원과 성장 전략 마련
 - 중앙자산키움펀드, 자활기금 등을 통하여 자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이 자활기업의 고용, 매출 등 내실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적과 관찰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보고자료를 활용한 정기적 통계 수집과 이의 활용 필요
- 정서적 자활지표의 실질적 활용 제고와 환류를 통한 사업 고도화
 - 자활 참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아닌 과정 중의 지속적인 지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자활지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낮아지며, 초기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점수가 올라가다가 실제 업무에 참여하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냄.
 - 자활의 과정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추적이 필요함.

02 자활사업 연구 및 교육 인력의 확보

- 자활사업의 과학적, 체계적 운영과 성과 측정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인력의 확보가 이뤄져야 함.
 - 특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주요한 역할이 조사 연구임에도 해당 정규 인력이 부재하며, 관련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직 2명이 해당 업무를 맡은 상황임. 여타 유사 공공기관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연구인력의 확보가 시급해 보임.
- 자활 지원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실무 경험의 체계적 축적을 위하여 교육개발 및 평가, 교육콘텐츠 생산, 교육컨설팅 인력확보가 필요함.

03 자활사업 종사자 인력확보 및 처우 개선

- 자활지원 인력의 정규화 도모
 - 자활사업 종사자 중에서도 게이트웨이를 포함한 사례관리 담당자와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담당자의 비정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지역자활센터 내 정규인력의 비율은 62.6%로 전체 사회복지사의 79.9%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이는 “사람 중심의 자활”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이 주로 비정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 개인의 심리적 자활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 일을 맡는 종사자의 고용 규모와 고용형태가 이러한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냄.
 - 장기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접근을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사자의 고용 형태 개선이 필요함.
- 자활 지원 인력의 적정 규모 확보
 - 종사자 1인당 적정 참여자 수 규모 기준을 바탕으로 자활센터 종사자 적정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자활센터가 자활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센터 1개소당 평균 2.18명이 추가로 필요함(정은희 외, 2022).

03 자활사업 종사자 인력확보 및 처우 개선

- 자활 지원 인력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활사례관리사의 경우 임금 중위값이 207만 원으로 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자활성 과금까지 최대 급여가 212만 원에 이르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자활참여자의 자활급여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함(2020년 자립성과금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최대월급여액은 최저임금을 초과함).
 - 종사자의 낮은 인건비 수준은 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자활사업의 질을 낮춤. 또한 자활사업 전반의 활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의 인건비 개선이 이뤄져야 함.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함.

04 자활기업의 창업 지원과 성장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역할 정비

- 예비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강화
 - 창업 시 지나치게 영세한 형태로 창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기업의 성장과 성숙 과정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만큼, 창업 단계에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의 과정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창업과 이후 관리와 관련한 지원을 지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으나,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 관리와 사업단 운영 등 이미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인 만큼 기업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자활기업의 창업 이후 관리는 광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으나 자활기업의 창업 전 단계에는 제한적인 역할임 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창업 직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광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운영 가능함.
-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선도적 모델 마련을 위해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역할 필요

감사합니다.

자활사업의 변화와 지원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 안미현

I. 서론	18
II. 자활사업의 변화와 자활지원체계	20
1. 지역자활센터 지정과 확대	20
2. 광역자활센터 설치 현황	21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자활센터) 설립	22
III. 자활급여 기본계획과 자활 지원인프라 고도화	23
1.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확대	23
2. 1·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주요 인프라 정책 및 성과	24
3.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27
IV. 결론을 대신하여	28

I. 서론

탈빈곤 정책의 주요 접근방식으로 자리잡은 자활사업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계층의 탈빈곤을 위한 제반 수단, 방법, 제도 등의 총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제15조 부터 제18조의 11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자활지원 체계란 정부·지자체와 민간 전달체계, 즉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광역·기초) 및 개발원·광역·지역자활센터를 의미하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보건복지부 외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지역사회, 법령 및 제도(지침 등), 정보시스템(행복이음, 자활정보시스템 등) 등 정보 자산,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펀드 등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복지부가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서 밝히는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정책에 집중하고자 민간전달체계와 그 통제아래에 있는 관리체계를 자활지원 인프라로 한정하여 논하려고 한다. 다만 자활지원 인프라 확대로부터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로 방향을 정한 복지부의 자활지원 전략을 확장하는 한도에서 기본계획에 미처 담지 못한 고민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만 더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중앙자활센터 설립으로 지역·광역·중앙 단위 자활지원 민간전달체계의 제도적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자활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국토부, 교육부 등으로 확산되고 특히 고용부와의 취업지원 관련 정책적 논란 확산은 자활지원 정책 체계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기본계획을 통하여 3년 단위 자활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금년은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마지막 년도로써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성과를 정리하고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24년~26년)을 수립하는 해이다.(9월 중 발표 예정이며, 이 글이 공유될 때에는 이미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것이다.)

먼저 자활사업의 도입 및 변화에 따라 민간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구 중앙자활센터)이 확대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1996년 자활사업 시범실시 후 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사실상 전국 확대가 완료되었으며, 2008년 중앙자활센터 설립('08), 광역자활센터 법제화('12) 및 제주광역자활센터 설치('21)를 끝으로 민간전달체계 확대는 일단락되었다. 이후 제1차,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주요 인프라 성과를 비교하고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자활지원 인프라는 자활사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며 계속 발전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그동안 계속되어 온 지역자활센터 중심의 자활사업 정책에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인프라의 기능 분화가 시작되었고, 협업과 연계는 대세가 되었다. 자활지원 인프라는 자활 진영 내·외부를 연계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자활관련 법령·정책 변화 주요 내용

시행시기	법령·정책	주요 변화 내용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 시범사업 실시 (관악 등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센터 지정(~1999년, 20개소)
1998.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법 개정 (97.8.22) 자활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보호(법11조) 자활후견기관(법11조의2) 명칭 변경 자활공동체(11조의3)
200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 폐지(대체입법) 가구별 종합자활지원계획 조건부과, 소득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급여(제15조) 자활후견기관(제16조) 50개소 추가지정 자활후견기관협회(제17조) 자활공동체(제18조)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활센터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자활센터(대구, 인천, 경기) 개설
2007.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6.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자활센터(제15조의2)설립(2008.7.) 지역자활센터 등(제16조) 명칭 변경 자활기관협의체(제17조) 자활공동체(제18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 사업자 수급자의 고용촉진(제18조의2) 자활기금의 적립(제18조의3)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리본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이관(2015)
2011.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형성지원(제18조의4) 희망키움통장 실시(2010)
20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제18조) 명칭 변경 광역자활센터(제15조의3) 추가
201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4.12.30.) 맞춤형 급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자활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 (신설 2014.12.30.)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관 자활의 교육 등(제18조의5) 연수원 설치 근거 법 개정
2018~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18.7) 자활사업 활성화 대책('19.10)
2019.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9.1.1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제1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 개발원 산하 한국자활연수원 설치
202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9.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운영 등(제18조의6)
2021~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행 중
2022.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21.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보고, 인정취소,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8조의2~5) 등
2024~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발표 예정

II. 자활사업의 변화와 자활지원체계

1. 지역자활센터 지정과 확대

자립지원사업(자활)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이전을 통한 급여제공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복지 의존성과 복지남용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과 생산적 영역으로의 복귀를 위한 투자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원종욱, 1998), 1996년 5개(서울 관악, 서울 노원, 서울 마포, 인천 동구, 대전 동구) 자활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3년간의 시범 실시 후 1998. 7.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법제화(제도화)되었다. 생활보호법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대체되어 본격적인 자활사업의 변화·발전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만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빈곤정책에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시민주의적 요소가 공조하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1999년 여름 비교적 정리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실업·빈곤 정책이 ‘생산적 복지’였다.(노대명, 2001) 자활은 ‘생산적 복지’가 표방하는 요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요건은 첫째, 신자유주의적 경제·노동 정책과 공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허용하는 정책(즉, 시장 교란 불용)이었다. 둘째, 적극적인 탈빈곤 추진이다. 셋째, ‘내재적으로’ 복지재정의 무한적 확대를 막는 정책(복지재정 절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자활보호가 읍·면·동 행정단위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급여를 전달하는데 그쳤다면, 자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노력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활공동체를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종의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된다고 인식하였다.(원종욱, 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지역자활센터는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설치되어 이듬해인 2001년 169개소, 2002년 192개소, 2003년 20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24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사실상 전국을 커버하는 대표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로 자리잡았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표] 지역자활센터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2015	2023
지역자활센터	5	70	169	192	209	242	247	251	250

한편 지역자활센터는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과정을 거치면서 5대 표준화 사업 외 특별한 자활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역동성 약화 문제 등에 직면하면서 사회적경제 제도를 차용한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5개 기관(남원, 봉화, 마산희망, 시흥작은자리, 제주 이

어도)으로 시작한 시범사업은 다양한 실험과 성과를 남기고 2020년 22개소까지 늘어났으나 2024년 시범사업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표]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과정

연도	추진 일정	추진 경과
2014	▶ 10월: 시범사업 참여 공모 신청 및 수행기관 선정	▶ 유형다변화 5개 기관 선정: 남원지역자활센터, 봉화지역자활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기능다변화 1개 지역 선정: 인천 부평구(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지역자활센터)
2015	▶ 3월: 유형다변화 5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보건복지부) ▶ 12월: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추가 공모 및 선정	▶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비실행 ▶ 유형다변화 2개 기관 추가 선정: 안산지역자활센터, 충주지역자활센터
2016	▶ 8월: 유형다변화 추가 2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보건복지부) ▶ 12월: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추가 공모 및 선정	▶ 유형다변화 2개 기관 추가 선정: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2017	▶ 8월: 유형다변화 추가 2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보건복지부)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총9개 기관 참여 중 ▶ 운영비 대비 10% 감액(9개 센터 일괄 최초 적용)
2018	▶ 유형다변화 추가 2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1개 기관 취소(보건복지부)	▶ 경기평택지역자활센터, 포항지역자활센터 (취소/ 총주)
2020	▶ 유형다변화 추가 12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보건복지부)	▶ 남양주, 부천나눔, 수원, 양주, 파주, 창령, 합천, 울진, 사상, 사하, 금정구, 보성
2023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종료 추진(~24년)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2014).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 자료(2014. 6) 등 참조

2. 광역자활센터 설치 현황

광역자활센터는 2004년 대구, 인천, 경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시범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강원, 전북, 2010년 서울, 2013년 충북, 경남, 광주, 2014년 대전, 충남, 전남, 경북, 울산 및 2021년 제주를 끝으로 전국 16개(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됨으로써 지역자활센터에 이어 또 다른 전국의 자활지원 인프라로 완비되었다. 광역자활센터는 자활지원체계가 주로 지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주체가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어렵고, 자활지원기관간의 연계 및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지적에 따라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김태완, 전지현, 2009)

광역자활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단위의 창업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자활기업(자활공동

체) 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 사업(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자활기금 위탁 운영 및 마이크로 크레딧 집행 등),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광역자활사업 DB 구축 등), 교육 훈련사업(실무자 및 참여자 교육 훈련 실시 등)이었다.(이인제 외, 2005) 1차로 지정된 광역자활센터들은 창업 지원체계 구축, 자활사업 광역화 및 자활기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경기광역자활센터가 광역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청소사업 공동브랜드화(경기), 영농공동체 발전(인천), 간병사업광역화(대구) 및 사례관리지원사업 실시 등에 대해 노력했으나 사례관리지원사업은 안정적 체계를 가지지 못한 과제로 있으며, 자활기금 위탁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자활센터 업무 전산화 미비 등에 따라 성과가 제한적이었다.(이선우, 2010)

한편 광역자활센터는 **운영주체**들이 다르고 지역자활센터와 밀접성 등에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들간 경쟁과 갈등관계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자활진영 내외부로부터 역할과 위상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서 다소 완화되었고 볼 수 있다.

[표] 광역자활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2004	2008	2010	2013	2014	2019	2021
광역자활센터	3	6	7	10	14	15	16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중앙자활센터) 설립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및 2007년 7월 시행을 거쳐 **2008년 7월 중앙자활센터(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가 설립**되었고, 한국자활연수원이 개원(2015.4)되었다가 중앙자활센터와 통합하여 2019년 7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발족하면서 자활지원 민간전달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자활센터가 설립되면서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실시한 희망리본 사업**은 수급자 취업지원 자활프로그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자활센터 인프라를 벗어나 광역자활센터를 활용하였으며, 노동부에 이관(2015)하여 취업성공패키지(수급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성과중심 취업지원 자활사업이라는 자활사업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 **2010년 시작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의 근로유인’과 ‘탈수급 장려’ 측면에서 복지부와 기재부가 적극 지원한 사업이다. 자산형성사업은 희망키움통장(수급자)과 희망키움통장II(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으며, 2021년 희망저축계좌(수급자), 희망저축계좌II(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 100%

이하 청년)로 개편되면서 서비스 참여자가 대폭 확대되어 수행하고 있다.

자활공동체는 2012년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국자활기업 설립('13,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운영 중)으로 자활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를 통일시키고 사업을 표준화한다는 취지에서 광역자활센터 위탁을 추진하여 16개 광역자활센터 중 12개소를 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표] 광역자활센터 설립일 및 위탁운영법인

연번	센터명	설립일	위탁운영법인	비고
1	대구광역자활센터	2004. 01. 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	경기광역자활센터	2004. 04. 01	(사)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3	인천광역자활센터	2004. 06. 01	인천광역시(직영)	
4	강원광역자활센터	2008. 03. 11	(재)강원도사회서비스원	
5	부산광역자활센터	2008. 05. 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6	전북광역자활센터	2008. 10. 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	서울광역자활센터	2010. 11. 09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8	충북광역자활센터	2013. 04. 0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9	경남광역자활센터	2013. 05. 27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0	광주광역자활센터	2013. 05. 2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1	대전광역자활센터	2014. 06. 1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2	충남광역자활센터	2014. 06. 1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3	전남광역자활센터	2014. 06. 1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4	경북광역자활센터	2014. 09. 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	울산광역자활센터	2019. 10. 0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6	제주광역자활센터	2021. 12. 1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Ⅲ. 자활급여 기본계획과 자활 지원인프라 고도화

1.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확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및 시행에 따라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었으며, 주거급여의 국토부 이관과 교육급여의 교육부 이관, 중앙자활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 및 연수원 설치 근거 법이 마련되는 등 자활을 둘러싼 여러가지 제도변화로 자활지원인프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맞춤형 급여개편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간 정합성을 높여 빈곤층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3년 단위로 자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별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급여기준의 적성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기본계획은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①자활사업 참여자(지원대상), ②자활프로그램 및 성과관리, ③자활기업 육성, ④자산형성, ⑤자활인프라 관련으로써 특히 **자산형성 및 자활인프라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되었다.

2. 1·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의 주요 인프라 정책 및 성과

제1차 자활급여기본계획에 나타난 **인프라 정책**은 중앙(1), 광역(14), 기초(250) 자활센터 지정·설치 및 자활연수원, 자활기금 등의 확충을 통한 사업기반 구축으로 자활기금 활용도 제고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이었다. 특히 중앙·광역·지역 인프라간의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이 달라 유기적인 협업이 어렵고 직무범위 중복 등 역할 분담이 모호한 비효율성 개선이 주요 과제였다. **과제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유인 강화** 관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통장별 상이한 업무체계를 개편하여 시군구는 대상자 모집선정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장려금 적립·지급 관련 업무는 중앙자활센터, 교육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여 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던 희망키움통장Ⅰ 업무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는 행복이음 등 **자산형성지원 전산시스템 재구축과 자활정보시스템(자산) 기능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 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현행			개편후	
	희망Ⅰ	희망Ⅱ	내일	희망Ⅰ·Ⅱ	내일
가입 신청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좌 동	
대상자선정	시군구			좌 동	
장려금 적립 및 지급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자립역량교육	-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은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원

과제5. 자활인프라 및 참여자 교육체계의 혁신 관련 주된 내용은 **중앙·광역자활센터**를 한국 자활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자활기업 컨설팅 교육, 자활생산물 판매지원,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관리 등 자활사업 운영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권역별 자활진흥원 지부를 설립하여 중앙·지역 간 사업 연계성 강화 및 광역자활기업 육성 등 지역별 특화사업 개발을 도모하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방안 검토와 현장 중심의 자활교육시스템 체계

화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설립**되었으며, 광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을 개발원으로 통합·추진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을 명료화하고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은 **코로나19 경기 여파의 장기화**로 수급자·차상위층 증가가 우려되는 정책 여건 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등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등의 대상 확대** 추진과 사회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K 뉴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21) 등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의 양 제도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 마련**이 중요하였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방역 수요 확대와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자활사업 영역(돌봄 등 대면 서비스, 집합적 제조업)의 충격 완화 및 **미래 적응형 자활인프라 변화** 필요한 여건 속에 추진되었다.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은 **과제5.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중앙에 집중된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권한 지자체 이관을 검토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광역자활센터 설치('22)로 2004년 시범설치 시작한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자활센터에 이어 전국을 커버하는 자활지원조직으로 완비되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공기관 지정('20)**을 계기로 자활사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명실상부하게 자활지원체계 정책은 인프라 확대에서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로 전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의 주요 요지는 민간전달체계인 개발원·광역·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명확화에 따른 기능 분화**, 주요 법적 기능인 **교육기능 내재화** 및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 조성, 자산형성지원, 교육관리 및 경영시스템 등 **전산정보자원 강화**로써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표] 제1차,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주요성과

제1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18-2020)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과제	달성현황	과제	달성현황
자활지원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자활사업과 타 제도와의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참여자 48,903명 조건부 수급자 취업우선제도 개선('18) 자활사업 참여 보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최대 34.2% 인상('19 26.6%) 자활장려금 재도입('19), 인센티브 확대 등 수급자 자활노력 이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유예기준 상향 '18년 60만원→9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20) 사회적경제에서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중심 연계 사업단 운영 공모 추진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편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성과지표 개선		개인별 자활모델 및 경로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청년자립도전 등 신설('18) 성과관리지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 실시('19) 및 성과지표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준비형 기초역량 배양 지원 (자활사례관리 확대 90→125개소) 및 표준 매뉴얼 마련 자립도전형 직무역량 제고 및 참여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참여자 58,902명, 자활급여인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청년 사업단 91개, 1,161명 		
경쟁력 있는 자활기업 육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기반 마련 및 기업모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지원 164개소(18) 업종별 고도화 지원 38개소(19) 지원체계 정비('19) 매출 활성화 지원(우선구매법령 개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사용 용도 확대(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성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기창업 근로유지 성과금 지원 등 창업 인센티브 강화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확대 (19년5개→22년 13개) 광역·전국자활기업 육성(한국 클린쿵, CI 선포) 		
자산형성 지원 확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형성프로그램의 다양화·유연화 (저축액 다양화, 청년통장 2종 신설) 자산형성사업 지원체계 개편(장려금 매칭 및 교육 일괄 개발원 위탁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형성지원 통장 재구조화(5통장→3통장, 장액 매칭, 청년지원 법령 개정 '21) 자산형성지원 평가기반 마련(패널 연구 '22) 		
자활인프라 및 교육체계 개편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지원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진흥조직 체계화·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광역자활센터 12개소 개발원 위탁 현장 중심의 자활교육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자활도우미 교육 직무기술 요육장 예산 확보 및 설치(~20) 청년내일 아카데미 운영(1.8천명) 자립지원비수당사자취업운영(200명~19) 자활사례관리기초심화교육(1.5천명~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추진 인프라의 기능적 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원 기능 정립 및 공공기관 지정('20) 제주광역자활센터 추가 설치('22 16개소) 교육활성화 및 온·오프인 융합형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자전문자취업기초 및 내무강사인정('22) 연수원광역 자활업 창업교육기초 체계('22)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활성화(누적 5만명('23) 자활관리시스템 및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형성포털 및 경영지원시스템 구축(21-22) 교육관리시스템 구축('22) 통합정보전산망 마스터플랜 수립('23) 		

3.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

제3차 자활급여 지원계획의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는 제1차, 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첫째**, 사례관리의 정교화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추진한다. **둘째**, 자활근로, 자활기업 및 자산형성 등 제사업의 지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셋째**, 인프라별 기능 명확화 및 유기적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첫째, 사례관리의 정교화에 따른 전달체계 정비

참여자 역량평가 제고를 통한 취업지원정책과의 연계성 재검토를 명시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제공 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교육, 취업활동 등 고용정보 공유하여 자활역량에 기반한 고용서비스 연계 내실화를 추진[**과제1 참조**]하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사 배치 확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역량평가체계 정비,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참여자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자활근로, 자활기업 및 자산형성 등 제사업의 지원·관리시스템 고도화

특히 인프라 관련 자활기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부여, 중앙펀드와 자활기금의 안정적 활용을 추진한다.[**과제3 참조**]

셋째, 인프라별 기능 명확화 및 유기적 협력 강화[과제5 참조]

○ 효과적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조정

구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현행	· 자활 지원 조사연구 홍보 · 자활 사업개발 및 평가 ·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자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훈련 등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자활 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 지도, 교육·훈련 등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근로·희,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활기업 창업, 운영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개선	↓ 정책 기획·조정 및 인프라 지원 기능 강화	↓ 광역 역할 명확화 및 평가 개편	↓ 사례관리 기능 강화 및 평가 방식 개편

○ 자활사업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간 협력 강화

- 사례관리 : 개발원(매뉴얼 과정 개발), 광역센터(사례관리사 교육), 자활센터(사례관리 실행)
- 자활기업 지원 : 개발원(창업자금 지원), 광역센터(창업교육경영 컨설팅), 자활센터(맞춤 지원)

○ 현장 중심 자활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대상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전문화, 비대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현장 교육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에서 드러나는 인프라 고도화 방안은 **자활지원 인프라 확대에서 자활지원 인프라 고도화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간의 자활지원 인프라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질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은 **‘연계’**라는 키워드가 특히 중요하다. 자활사업과 취업지원 정책 수행기관의 연계성 강화, 개발원(연수원)·광역·지역자활센터의 연계 운영 및 역량 재배치, 자활근로·자활기업·자산형성지원사업 간의 연계성 고려, 비단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 연계 사회서비스 개발, ESG 연계 자활사업 개발 등 자활사업의 전반에 걸쳐 ‘연계’는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정보자산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비록 차세대 행복이음이 아직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데이터 기반 행정**은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자활정보시스템(자활·자활기업·자산) 구축을 통해 자활지원 및 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어느 정도 이루었으며, 향후 자활이력과 개인의 변화를 정보시스템에 축적하고, 자립역량 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등 **고용정보와 연계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망분리 등을 통한 개발원·광역·지역자활센터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정비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가 **도시 빈곤층 대상**으로 시장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새로운 **자활정책 대상 확대**를 자활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 **생산적 복지, 시장친화적인 복지**, 그러면서 **적극적인 탈빈곤 추진**은 자활이 반드시 추구해야할 정책이다. 자활의 목표는 근로미약자의 적극적인 탈빈곤에 있으며,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청년들의 중위소득 100%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21 개정).

자활지원 인프라의 고도화는 전달체계 고도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체계 구축**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자활학회**는 어떤가? 자활사업 시작 후 거의 30년을 지내면서 많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자활사업의 성과를 축적해왔다. **자활 ODA**는 자활사업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활기금과 중앙자산 키움펀드**는 자활사업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자활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 자원은 자활사업 고도화에 사용되어 자활사업 발전에 선순환 되어야 한다.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체계 구축에 학계, 연구자 및 자활전문가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항상 반보 앞에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토론문

세션주제: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시행방안”

토론자 배지영(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이루어진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임.

최근 정책 여건의 변화는 ‘천만 노인 시대’, ‘백세 시대’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음. 지난 5월 발표된 국가 사회보장 전략에서도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새로운 사각지대’로 취약 청년과 중장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특히 빈곤-불안전고용-주거 취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약자복지 강화를 제시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새로운 사각지대,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신취약청년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확인된 5-60대 취약중장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지원방안의 공통적인 부분은 1:1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 등임.

함선유 박사님의 발표자료에서 나타나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 고령자의 증가는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에도 반영되어 자활참여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참여자의 근로능력 평가를 나름대로 촘촘한 기준을 가지고 ‘점수화’하고 있으나 ‘자활역량’이 제대로 포착되고 있는지, 이들이 이후 역량에 기반하여 적절한 자활사업에 연계되거나 또 그 이후 탈수급으로 이어지는지의 성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함.

그간 자활참여자의 근로능력, 혹은 자활역량 평가는 참여자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한 초기평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에 대한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함. 개인의 ‘역량’에 대한 평가 요소를 다변화, 정교화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역량에 근거하여 이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여자 역량에 대한 담당자 혹은 사례관리자의 재량적 판단, 전문적 판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함. 이러한 점에서, ‘개인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은 더욱 강조되

어야 하는 요소임.

따라서 현재의 지역자활센터는 개인맞춤형 사례관리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요구됨.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단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자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 지원, 자활기업 지원 등은 광역과 중앙이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활센터는 학습과 도전을 위한 실험, 관계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등 개인 역량도 중요하나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 여건의 조성도 중요함. 자활사업 참여자가 대체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개인임을 고려할 때 개인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연계·조정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건강,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활 참여자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의 협력도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함.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개인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연계’가 필수적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상당히 분절적 체계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나 자원의 연계는 사례관리자의 주요한 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참여자 중심의 자립지원을 위한 연계에서 ‘정보공유’는 핵심적인 기반임.

‘사업’을 위한 확장이 아니라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인 참여자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목적에 기반한다면 자활참여자의 역량에 주목하고, 역량의 변화가 축적(인증)되고, 이를 지원하는 사례관리자의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처우개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토론>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을 위하여

이 소 정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

1. 자활사업 정책목표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자활의 정책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 1)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변화 : 노동의 다변화 및 노동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대
 - 2) 위험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 자립의 조건과 환경이 확장, 개인의 더 큰 역량 필요
 - 개인의 다차원적 역량은 축소 (정신건강, 사회성, 생활력 등)

☞ 근로는 자활의 충분조건인가? 근로는 자활의 필요조건이다!

1-1. 진정한 자활은 역량강화

- 자활에서 '근로'의 위상 규정은 (충분조건 vs 필요조건) 정책의 목표와 성과측정 방식 재규정에 직결
 -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vs 사회성과 공동체성 향상, 심리적 안정, 생활습관 형성, 건강상태 개선, 지식기술 증진 등 '탈수급의 조건' 형성

☞ 1차~2차에 이르는 자활급여기본계획은 이러한 방향성을 '묵시적으로' 반영

-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 명시적 재규정 (ex. 다차원적 역량강화) 과 이에 기반한 성과 지표 제시 (3차 기본계획의 사회통합지표의 위상 확대)

2. 데이터기반 성공적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의 철학적 지향 : 복지제도의 관료주의와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해소
- 이를 위해 성공적인 자활사례관리가 중요함
- 성공적인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조건
 - 1) 자활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 : ①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 ②자활사례관리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2) 통합적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포함) 활용, 데이터기반 욕구맞춤형 계획수립 및 실행
- 통합적 자활정보시스템 : 행정정보의 통합을 넘어 욕구진단, 사정, 활용가능 서비스 인프라 연계, 나아가 맞춤형 자활 경로 및 모듈 설정 등 포괄적 활용
- 자활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역량 구축 (자활복지개발원)

3. 청년 특화 자활 모델

<청년 자활의 중요성>

- 전체 청년 인구 중 수급자 비율 : 2012년 1%→2022년 2.3%
- 청년층 수급자를 일반 중장년 이상 수급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적용하는 것 보다 청년 특화 자활 모델 개발 및 확대 필요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확대>

-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확장 필요
-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산 및 부채관리 컨설팅, 저축 및 소비습관 형성 등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컨설팅 프로그램)

MEMO

2부. 자활정책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발표문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개발원 사업 전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향희(일자리사업본부) / '23.10.20.(금)

목 차

- 1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추진내용 및 개발원 추진사업 -----3
- 2 정부 정책방향과 자활사업 전망 -----19
- 3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 추진개요 ----- 26
- 4 제3차 기본계획 과제 이행 & 개발원 사업 전략 ----- 36



01.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추진내용 및 개발원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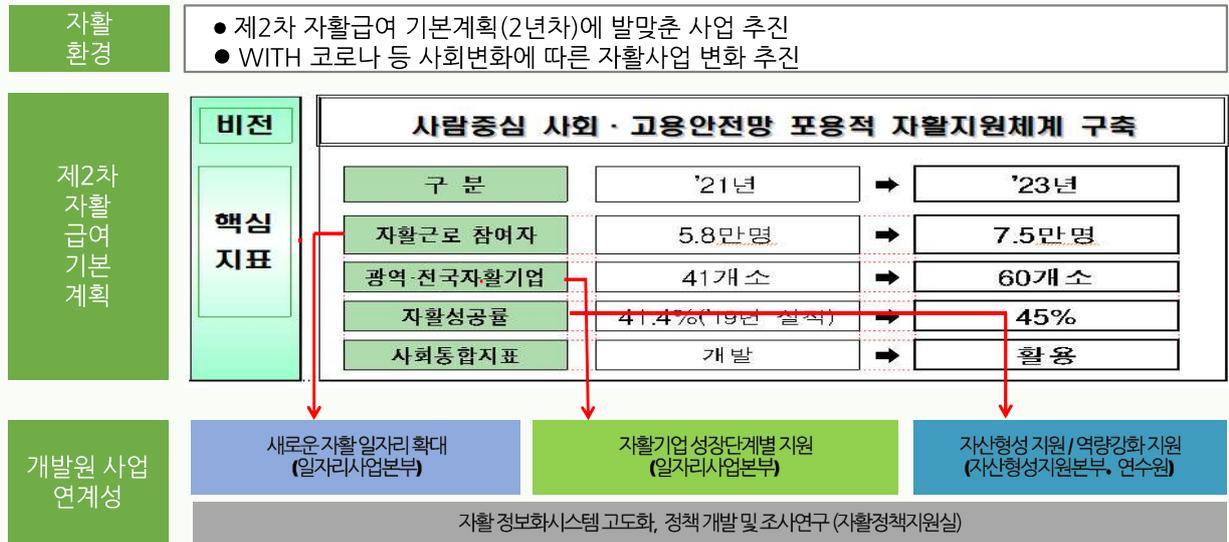
3

1. 정책 여건

- (경기 하강 기조)
 - 경제성장률 소폭 하락 ('22년 2.6% → '23년 1.4%(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 감소 ('22년 5.1% → '23년 3.5%(예상))
 - 고용 둔화 ('22년 82만명 → '23.5월 35만명(예상))
- (저소득층 실태)
 - 수급자 수 증가 ('18년 174만명 → '21년 236만명)
 - 노령층 수급자수 약 2배 증가 ('18년 47.2만명 → '23년 99.5만명)
 - 중위소득 50% 이하 1~2인 가구 비중 ('16년 51.9% → '21년 64.6%)

4

2. 그간의 성과



5

2. 그간의 성과

- (자활근로 대상·보장 확대)
 - 자활참여자 꾸준히 증가 ('20년 5.5만명 → '22년 5.9만명)
 - 자활급여 인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 ('20년 대비 '22년 10% ↑)
- (신규일자리 발굴) 다회용기 세척 등 신규 자활사업단 모델 발굴
- (자활사례관리 고도화) 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90 → 125개소 배치)
- (인프라 지속 확충) 광역자활센터 1개소 추가(제주, 총 15개소 → 16개소), 자활정보시스템 고도화 (자산형성,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6

2. 그간의 성과

• (자활기업 지원 강화)

- 판로개척 등 법적 근거 마련, 성장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자활기업 유지 기간 증가*, 전국 자활기업 추가 설립('22년)

* 2년 유지율 ('20년) 63.9%→('22년) 87.3%, 평균유지기간 ('20년) 6.5년→('22년) 7.5년

• (자산형성 지원 확대)

- 기존 통장 통합(5개→3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신규 참여자 수 대폭 확대('20년 1.9만명→'22년 5.1만명), 근로청년(중위 100%) 지원 강화

7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과제 달성 정도 점검

- 2-1-3. 자립지원전문서비스 업무 표준화 :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보급 및 적용
- 2-2-2. 청년, 자영업자, 긴급복지 등 신규 대상자 발굴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확대
- 3-2-2. 자활기업 브랜드화 : 친환경 공동브랜드 '에코워싱' 전국 확대
- 3-2-1. 마일스톤 방식 지원 : 창업-성장-성숙단계 지원체계 구축, 펀드 활용도 제고 및 지원 확대
- 3-2-2. 규제완화 및 판로지원(공공사업 유치지원) : 우선구매 지원 (법 개정 '21.7), 자활생산물품 전수조사 실시
- 3-2-1. 자활기업 인정·취소요건 명확화 : 연 2회 사업보고 효율성 개선(시스템)
- 3-2-2. 자활기업 통계관리 강화 : 사업보고 법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 '21.7) 및 자활기업 실태조사 실시
- 3-2-3. 자활기금 관리모델 개편 : 지자체 자활기금 중앙위탁 수요조사 등 진행 중

8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전국 확장 가능한 사업 개발·확산 및 자활인프라 확충

-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대폭 확대로 자활사업단 성장 기반 마련
 - ('22년 2,171백만원 지원 → '23년 4,248백만원 지원 : 전년 대비 지원규모 96% 증가)
-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지원 확대로 신규사업 추진 활성화 (3년 계획 따라 단계적 추진)
 - 자활 집중육성사업 '다회용기세척사업*' 등 신규사업단 규모화 적극 지원
 - * 사업장 전년대비 182% 증가, ('21년) 17개소→('22년) 48개소
 - 일자리 전년대비 180.2% 증가, ('21년) 269명→('22년) 754명
 - ** 자활근로사업단(2,790개) 개소당 평균 일자리(10.1명)보다 55.4% 많은 15.7명 고용
- '자활센터 시설개선 사업' 신설로 취약계층 이용 공간 인프라 개선
 - 수급자 등 상담, 교육, 휴게공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공간 조성 등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재개
 - '2018년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하고도 사업 폐기(소유권 문제)
 - 지역자활센터 건립 및 자활기업 공동인프라 건립 지원사업으로 '22년 신설
 - '22년 예산지역자활센터 등 4개 센터 건립 지원
 - * 투입예산(1,998백만원) 대비 지자체 예산 5,805백만원 (2.9배) 매칭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과제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큰 기여

- 창업 중심 → 창업-성장-성숙단계로 확장
- (사업 수) '19년 대비 8개 사업 신설 : ('19년) 5개 사업 → ('22년) 13개 사업
- (예 산) '19년 대비 22,737천원 증가 (12배 증가)
- ('19) 2,080천원 → ('23) 24,817천원(전체 중기예산 45,179천원 중 55%)

구분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창업	자활사업단(기업)경영관리지원	●	—	—	—	→
	단계	자활기업 창업자금(조기창업인센티브지원)	—	●	—	—	→
		공인인증(HACP 등)지원	●	—	—	—	→
		판로지원(온오프라인입점지원, 사회적경제박람회 지원)	●	—	—	—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	—	—	—	→
		자활생산품 경쟁력 강화사업	—	—	●	—	→
	성장	규모화 및 협업지원사업(자활기업 컨소시엄, 최대1억원)	—	—	●	—	→
		자활기업 경영위기 관리사업(코로나19피해기업 지원, 22년 종료)	—	—	●	→	—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기업당 최대5천만원)	—	—	—	●	→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기업당 1명 지원, 최대5천)	—	—	—	●	→
	성숙	우수자활기업 선정(기업당 2천만원 포상, 장관 인증서 발급)	●	—	—	—	→
		우수자활생산품 선정 및 품질개선 지원	—	—	●	●	→
		자활사업 활성화인프라 구축지원(기초, 광역 지자체 신청/최대5억원)	—	—	—	●	→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제2차 자활급여기본계획 과제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큰 기여

- (펀드) 2019년 4분기 이후 사업단 매출액 중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 적립하면서 자활기업 지원사업 대폭 증가
 - 2019년 : 신규사업 없이 기존 사업 수행으로 지원규모가 크지 않음
 - 2020년 : 신규사업 추진이 9월부터 이루어졌으며, 2021년부터 본격 사업 확대
- (자활기금) 당해 집행 총액 대비 자활기업 지원비율 낮음
연도별 지원금액 편차가 커서 지원 예측 어려움
'21년은 당해 조성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지원 포함 집행을 낮아짐
- 자활기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기금	집행금액	2,431	3,342	6,205	5,533	4,698
	총액 대비 비율	17	16	17	16	14
중앙자산 키움펀드	예산금액	-	-	2,080	8,777	10,781
	총액 대비 비율	-	-	-	75	45

11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중앙자산키움펀드 사업 실시 3년차(2차 기본계획과 동일)로 사업 운영체계 안착 및 집행을 제고
- 광역자활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효율적 사업 운영 및 지역밀착 지원 강화
 - * 자활기업 창업자금, 사업개발비 등 8개 사업 직접 수행
- 자활 현장 양대 협의체 및 광역자활센터 - 개발원 간 긴밀한 사업 파트너십 구축
 - 개발원-센터협회-기업협회-광역자활센터협의회 등 4개 주체 정기회의 : 실무총괄(연4회), 대표자(연2회)
 - 개발원-센터협회, 개발원-기업협회 : 각각 월 정례회의
- 자활 현장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지속적 사업 개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자금	운영자금: 사업단별 매출액 반영하여 한도액 계산	운영자금 : 최대 1억원 지원, 임대보증금 최대 3억원 용자
사업장환경개선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합산 최대 5천만원	-기존 사업단 :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각각 최대 5천만원 -신규 사업단 : : 사업비 및 임대보증금 각각 최대 1억원 * 규모있는 사업단 설립 지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신규사업개발및기존사업업그레이드와 직접 관련있는사업비만 지원	- 노후된 장비 교체까지 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기업(사업단)별 최대6회, 회당25만원 지원/연1회공모	-기업(사업단)별 최대 10회, 회당 30만원 지원/연4회공모
지역특화자활사업	광역자활센터 당 최대6천만원, 단년 지원	-광역자활센터 당 최대 1억원, 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
자활센터 시설개선사업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부재	'22년 사업 신설 '23년 종사자 사무공간 개선도 지원범주 포함

12

3.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 코로나19 등 사회환경적 위기 상황 적극 대응

- 코로나 19 시기 긴급자금으로 활용: 자활기업 경영위기관리사업 약 45억원(21~22) 지원
* 매출감소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전수 지원
→ 이 결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활기업 2년 유지율 향상 (21년 76.3% → 22년 87.3%)
- 코로나 19 대응 '온라인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자활사업 참여주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실습장' 구축

◆ 그외사업

- 사례관리 매뉴얼 개정, 사례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광역 단위 사례관리 지원사업 실시
- 광역자활센터 평가: 절대평가로 개선, 2년 단위 평가로 개선
- 청년, 거리노숙인 등 더 취약한 계층 자립 지원 확대

13

4.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지원사례

- 자활 인프라 지원 사업 : **홍성지역자활센터** / 연면적 1454㎡(지상 3층, 지하 1층)
- 사업단 4개소,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정면1>



<정면2>



<측면>



<뒷면>

14

4.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지원사례

- ▶ 창업자금 지원 : 규모 있는 자활기업 창업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조선소 커피/경북)



북콘서트 행사



갤러리 운영

15

4.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지원사례

- ▶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신규 제품(공정무역제품) 개발 지원(제주)



■ 제품 디자인 · 공정무역 커피 OEM(주문자위탁생산)
→ 원두커피와 캡슐커피 개발



■ 인증서 출원 비용 지원
→ 국제공정무역 인증



■ 온라인 홍보
→ 홍보 프로모션 진행

16

4.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사업 지원사례

- 자활근로사업단 환경개선사업 : 외식사업단 확장(전남)



17

4. 그간의 성과 : 일자리사업본부 지원사례

- 자활 집중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 : 다회용기세척사업 표준화 및 전국 확산



18

02. 정부 정책 방향과 자활사업 전망



19

1. 추진상 한계

• (수급 장기화)

- 참여자 고령화, 근로능력 미약자 및 복합적 문제(가족, 정신건강, 부채 등)를 가진 참여자 증가로 탈수급 목표 추진 난항
- 자활성공률 하락 ('20년 26%→ '22년 24.3%) 및 수급 만성화 경향*

* 4년 이상 참여자 증가('19년 16.4% → 19.1%), 자활 재참여 비율 5년 평균 약 73%



20

1. 추진상 한계

- (기업 환경 악화) 자활기업 창업 유인 감소 및 외부 여건 악화로 인해 폐업 증가,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운영되어 성장·규모화 한계*

* 개인사업자 비중 46.8%(474개), 5인 미만 기업 64.8%(656개) (자활정보시스템, '22년)



- (공급자 중심 자산형성 한계) 제도 개편 및 가입자 급증으로 인해 가입자 중심 가입 간소화 및 보장기관의 현장 밀착지원 미흡

21

2. 국정과제와 자활사업의 연계성

현 정부 복지 정책방향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약자복지 강조**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사회서비스 확대, 고도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탄소 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 국정목표와 연관된 자활사업 일자리모델(사회서비스, 친환경 분야) 개발 추진

22

3.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3.7.4. 관계부처합동 발표

- 긴축 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약자복지, 취약계층 지원> 강조
 - (저소득층)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 지속
 -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요건 명확화 및 세제 혜택 지속 제공
 - (사회서비스 고도화)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23.5) 후속조치 이행
 - 일상돌봄서비스*를 도입('23.7) : 이미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영암군, 해남군 등) 사업 개시
 -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대응
 - (자립지원 강화) 자활역량평가를 개선*하고, 민간일자리와 연계된 자활사업을 확대
 - *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디지털 문해력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
 - ** 성과지표 개편 등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4.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 1. 사회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액 최대 13.2%* 올라 월 21만 3천원 더 지원
 - *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액 6.09% 인상
 - * 생계급여 70%→80%로 10% 인상 반영
 - 최종중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
 - 신규 노인일자리 14.7만 개 창출, 노인일자리 수급도 6년 만에 7% 인상(2~4만명)
- 2.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제갈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임신전 필수가임력검진(생식건강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금·식습·비용 국가 지원
 -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100만원 인상
 - * 부모급여 : 60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50~50만원
 - * 첫만남이용권 : 첫아 200만원, 둘째 아상은 300만원
 -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대(1,030~2,315개 번)
- 3.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급·소아의료체계를 만듭니다.**
 - 응급환자 발생부터 치료까지 지역내에서 신속한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전 과정 연계강화
 - * 지역응급실(응급실·ICU, 응급실·ICU, 응급실·ICU) 등 응급의료기관간 연계 강화(1차, 2차, 3차 의료기관 연계 등)
 - 경증부터 중증질환까지 24시간, 거주인근에서 상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의료기관 구축
 - * 4차 의료기관(소아·청소년·산부인과·정신건강) 100개소(2024년 100개소) 설립
 - 국민 누구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도입
 - * 20년 총예산 2,000~2,500억원
- 4.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대폭 투자(12% 증가)
 -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31.7% 증가)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교류 확대
 - 국가 보건 미래 성장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495억원), 글로벌 최고-그라운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원) 도입

4대 핵심투자

보건복지부

- 약자복지 확산·내실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최대 13.2%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21만 3천원 더 지원
 - 생계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 올해보다 6.09% 인상
 -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위기가구 발굴 위한 시스템 및 민관협력 강화, 노인·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 (두터운 보호) 생계, 의료 등 복지문턱을 낮춰 저소득층 두텁게 보호,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실질적 생계비 경감
 - (자립기반 확충) 자산형성, 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

4.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 자활지원 예산 : 1조원 초과, 자활사업 예산 전년 대비 7%(548억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안
(1)자활지원(1137)	일반회계	821,134	939,700	1,043,430
자활사업(300)	일반회계	696,392	693,573	748,440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306)	일반회계	2	2	7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309)	일반회계	108,288	227,646	275,780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311)	일반회계	16,452	18,479	19,203

25

03. 제3차 자활급여기본계획 추진 개요



26

1. 추진 방향

추진
방향

◆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 기반 조성

세부
추진
과제

1.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2. 자활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3.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자립 유인 확대
5.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능 확대

2. 추진 목표

구 분	'23년	→	'26년
자활근로 참여자	5.9만명	→	확대
자활사례관리	125개소	→	확대
자활성공률	24.3%('22년)	→	27%
사회통합지표	개발	→	활용
자활역량평가	기존	→	개편
자활기업 2년 유지율	81.8%('22년)	→	85%
자산형성 누적 수혜자수	11.3만명	→	15만명

3. 추진 과제

①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자활 역량 평가)

- 현장 활용도 높일 수 있는 자활역량평가 개편* 추진('24년~)

● (고용서비스 연계 내실화)

- 저소득층의 취업시장 진출 및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해,
취·창업 의지가 약한 사람에 대한
자활사업 우선 연계-고용서비스 순차 이동 경로 마련 및
지자체-지역자활센터-고용센터 간 협조 체계 강화

29

3. 추진 과제

● (사례 중심 자립 지원 체계화)

① 사례관리 인프라 및 체계 고도화

(전체 지역자활센터 250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등)

②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25년~)

③ 참여자 개인별 근로활동·교육 이력, 탈수급 경로 등 정보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자활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추진

30

3. 추진 과제

② 대상자 확대 및 자활 일자리 확대

- (자활 참여 대상자 확대) 자활 참여자 규모를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수와 연동하여 전체 대비 일정비율로 매년 확대
- (대상확대 시범사업 연구) 차상위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참여 대상 확대 시범사업 연구 실시
*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 자립준비청년, 농어촌지역 등
- (자활사업단 다변화) 영세한 규모의 자활사업단의 규모화 및 신규 사업 모델 다양화 지원, 근로 시간 유연화

31

3. 추진 과제

③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위한 내실있는 지원 체계 확충

-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전 창업 컨설팅 제공(최대 6개월), 창업 인센티브 확대(지원금 인상)
- (맞춤형 성장 지원 위한 제도 마련) 소기업 규모화 지원,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 중앙 경영지원단 운영, 부처간 정책협조 강화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지원 확대) 자활기업 생산품 관리 및 우선구매 시스템 구축, 업종별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근거 마련
-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자원·인프라 조성) 사업보고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조직 확충

32

3. 추진 과제

4]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자립 유인 확대

- (지속가능성 제고) ①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 기준 소득 완화 (예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확대 검토) 등 청년지원 강화,
- ② 선정기준 개선 ③ 가구원 및 기존 참여자 등 가입 기회 확대,
- ④ 지급요건 및 환수해지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 (지원체계 내실화) 멘토링, 교육 등 참여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자산형성포털 활용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 패널연구를 통한 참여자 변화 요인, 정책 체감도 분석 강화

3. 추진 과제

5]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능 확대

- (인프라별 기능 조정) 기관별 전문적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구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현행	· 자활 지원 조사연구·홍보 · 자활 사업개발 및 평가 · 정보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자활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훈련 등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자활 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 지도, 교육·훈련 등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근로기회,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활기업 창업, 운영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개선	정책 기획·조정 및 인프라 지원 기능 강화	광역 역할 강화 및 성과평가 개편	사례관리 기능 강화 및 평가 방식 개편

3. 추진 과제

5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능 확대

○ 현장 중심 자활 인적자원 역량(HRD) 강화

- 대상별 직무역량강화 교육 전문화

① (종사자) 직무·경력별 교육과정 고도화, 자활사례관리사 교육 강화

② (참여자, 자활기업) 초기 기초역량교육 확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참여자 취·창업 역량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 전문화

- 비대면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현장 교육 활성화 지원

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확대 및 교육관리시스템(LMS) 고도화 추진

② (현장 교육 강화) 지역·광역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35

04. 제3차 기본계획 과제이행 & 개발원 사업 전략 -일자리사업본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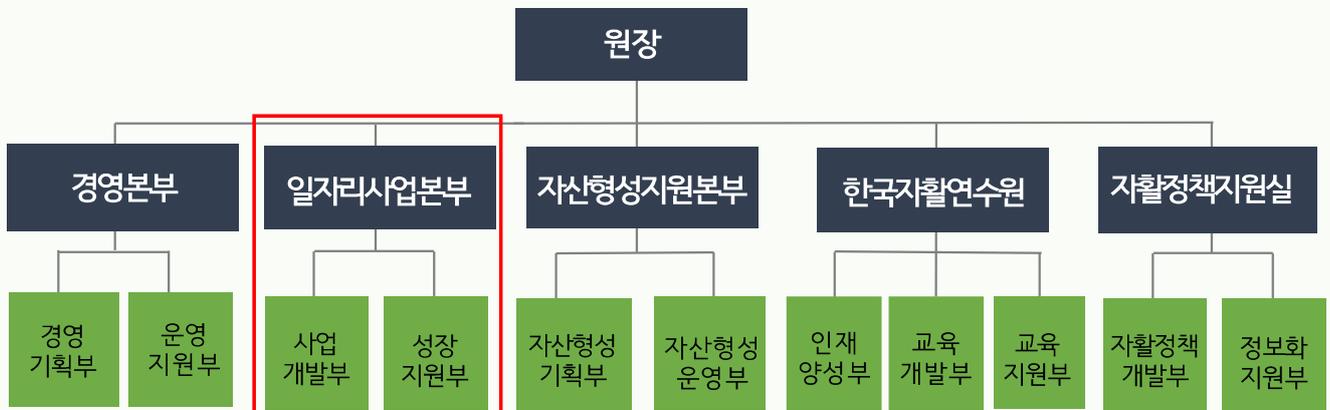
36

1. 사업전략 핵심 키워드

- 정책** | • 정책-사업 간 **정합성 강화** ('24~'26년 중기 전략계획 수립)
- 사업방향** | • **자활 현장 맞춤형 지원 고도화**
- 사업방식** | • **규모화, 협업 방식 사업 적극 지원**
- 거버넌스** | • **개발원-자활 지원 인프라 간 파트너십 확대**
- 예산** | •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지속 확보 및 중기펀드 안착**
- 사업관리** | • **PDCA에 따른 성과 관리 (Plan-Do-Check-Act)**
- 시스템** | • **수요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신규) 자활통합정보전산망, 우선구매시스템, (개선) 센터 성과평가시스템, 중기펀드 시스템 등

2. 조직 체계도

○ 각 본부, 부서별 명확한 역할 정립 및 과제3차 기본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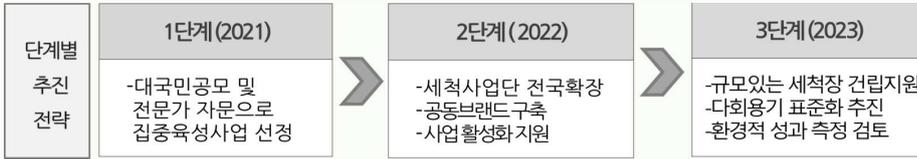


* 2023.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

본 발표는 일자리사업본부 전략중심

3. 향후 3년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 개발원, 현재 중기('24~'26) 전략 계획 수립 중 (10월 완료 예정)
- '다회용기 세척사업'이 성공적 수행 가능했던 이유: 3년차 단계별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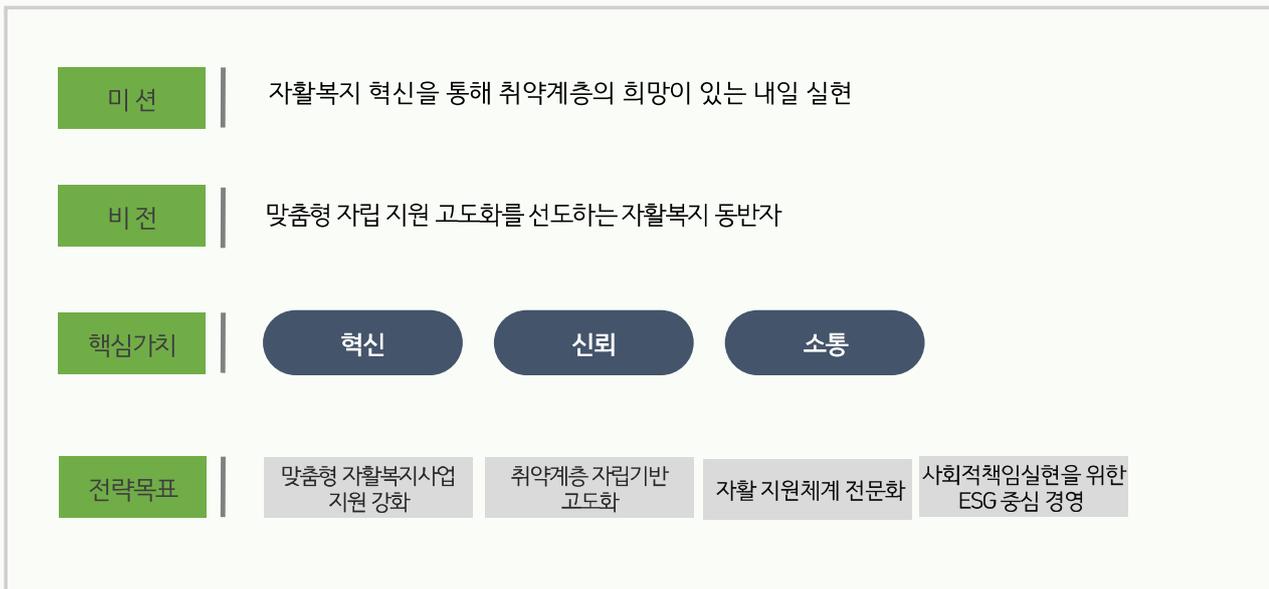
- 신규 세척사업단 구축 사업비 적극 지원
 - 신규 사업단 1개소당 지원 한도액* 상향 조정
 - * (2020) 5천만원 → (2021) 1억원
- 세척사업단 공동브랜드화 추진
 - 업무 표준화로 질 높은 자활사업단 운영 가능
 - 규모화 한계 극복, 원가절감 효과 등 기대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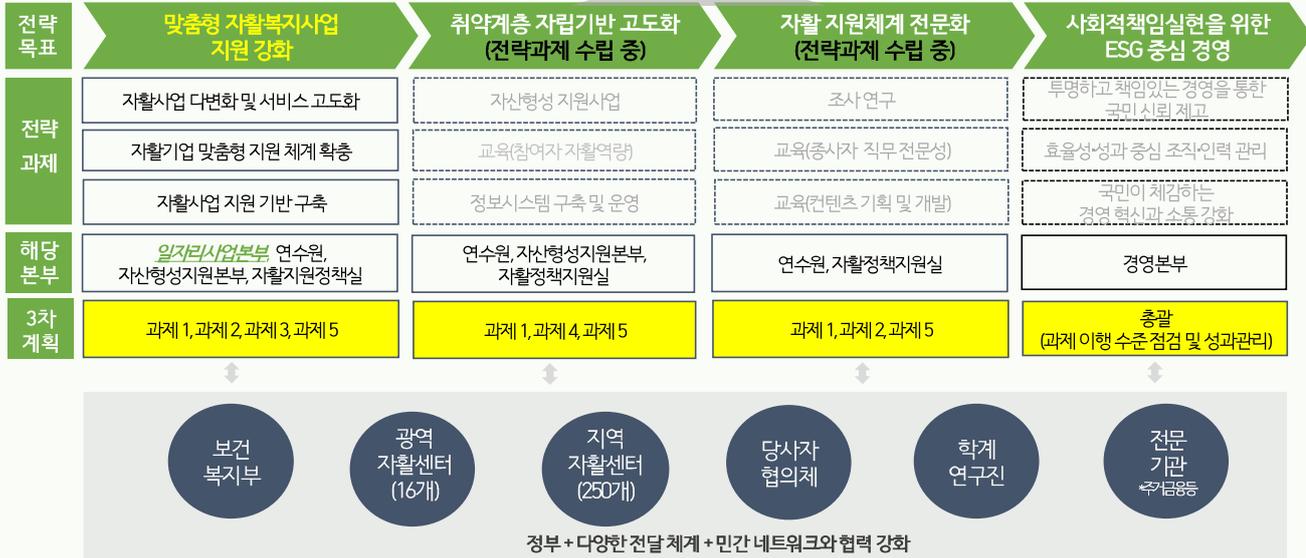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적 성과 측정 자문
 - 현재는 일자리 창출, 회용품 절감 효과 측정 가능
 - 향후 순편익 계산별도 연구 추진 필요
- 우리기관-서울광역자활센터 협업 도시락 표준용기 개발
 - 디자인개발, 금형제작, 용기 제작 완료
- 사업단 규모화 위한 사업비 적극 지원
 - * (2022) 1억원 → (2023) 2억원

4. 중기전략 계획(초안)



5. 사업·경영 체계도(초안)

자활복지 혁신을 통해 취약계층의 희망이 있는 내일 실현



6. 일자리사업본부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초안)

전략목표 1. 맞춤형 자활복지사업 지원 강화

전략목표	전략과제	핵심 추진내용
맞춤형 자활복지 사업 지원 강화	자활사업 다변화 및 서비스 고도화 * 3차 기본계획 <과제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모델 개발 및 육성(친환경, 사회서비스 등) 자활근로사업단 규모화 지원 확대 참여자 특성 반영 지원 강화(청년, 노숙, 사례관리)
	자활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확충 * 3차 기본계획 <과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등 창업 전 지원 강화 인센티브 확대 등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자활사업 지원 기반 구축 * 3차 기본계획 <과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 지원체계(지역, 광역) 성과관리 체계 개편 * 지역-광역-개발원 역할 명확화 등 정책 개발 및 지원 (법, 지침 개정 등) 자활 지원 인프라 간 협업 체계 강화

- 시스템 개선 및 신규 구축

- 지원 인프라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1 자활사업 다변화 및 서비스 고도화

3차 기본계획 <과제 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 (자활근로사업단 규모화) 일자리 확대 및 자활기업 창업 가능성 향상
 -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종 또는 동종 사업단의 공동작업장 지원 등
- (신규사업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연계 사업 발굴 및 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안전주택 수리 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 중 (~'23.12), 성공적 수행으로 본사업 안착 지원이 목표
 - 공단-개발원 협약, 한국주거복지사협 및 주거복지 자활기업 참여
 - 교육부 '늘봄학교' 간식 및 석식 제공 인프라로 자활사업단(기업) 참여 제안 추진 등

43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1 자활사업 다변화 및 서비스 고도화

3차 기본계획 <과제 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 (신규사업 육성) 친환경 분야 『자활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 (신규사업 육성) ESG 기반 친환경 사업 전환 지원

- 친환경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패키지 개발, 친환경 원재료 전환 등)

44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① 자활사업 다변화 및 서비스 고도화

■ 사례관리 지원체계 고도화

3차 기본계획 <과제 1.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 (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 광역단위 사례관리 정기적 컨퍼런스 개최 및 우수 사례 발굴·전파, 사례관리자 교육 강화(연수원)
- (매뉴얼 표준화)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사례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례관리 업무 표준화 지원
- (자활 인프라 역할 정립) 개발원(매뉴얼·과정 개발), 광역센터(사례관리사 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자활센터(사례관리 실행)
- (인력 확보 지원) 사례관리사 추가확보를 위한 대정부 예산 활동 지원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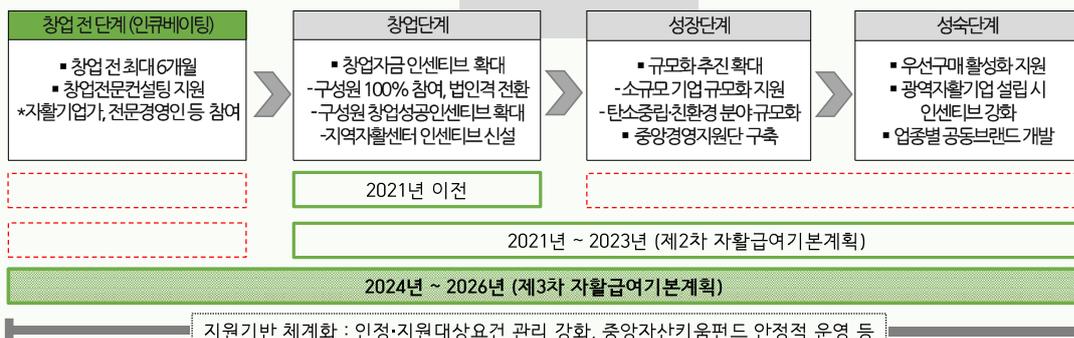
② 자활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확충

3차 기본계획 <과제 3.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 맞춤형 지원 체계 완성

: 창업단계 → 창업-성장-성숙단계 → 창업 전-창업-성장-성숙단계

자활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창업·경영 내실화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2 자활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확충

3차 기본계획 <과제 3.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 창업 전, 창업 지원 강화

- (사전 창업 컨설팅) 창업 이전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창업 성공사례 정보 공유
 - 성공한 자활기업가, 업종별 전문경영인 등 활용하여 기업 경영, 마케팅 등 관련 노하우·사례 교육
- (창업 인센티브 확대) 성장 가능성 높은* 자활기업 창업 시 자활기업, 자활기업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 제공
 - * 사업단 구성인원 100% 자활기업 참여, 법인 전환, 2개 이상 사업단 규모화 등
 - 지역센터 공모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매칭금 면제, 담당자 포상 시 가점 부여 등 모든 주체에 인센티브 제공
- (성과평가 지표) '23~'26년 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 '자활기업 창업 지원' 신설 : 2년 간 자활기업 2개 창업 지원 시 해당 지표 만점

■ 성장, 성숙 단계 중기펀드 사업 지속 활성화 : 사업 개선 및 펀드 예산* 집행률 제고

* '23년 기준 자활기업 지원 약 2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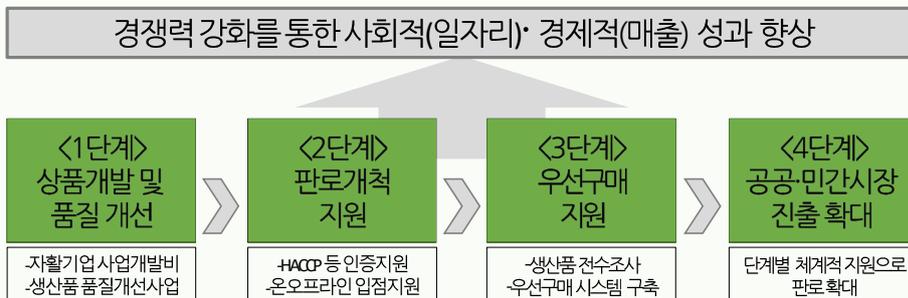
47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2 자활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확충

3차 기본계획 <과제 3.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 판로지원 확대



- '우선구매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프라 마련 (예산 확보 필수)
- * 우선구매 실적 관리 시스템 겸 자활생산품 구매 전용 온라인쇼핑몰 구축
- 정기적 자활생산품 전수 조사 및 공공기관 홍보 지원
- 명절 선물전 등 중앙 단위 다양한 판로 확대 사업 추진

48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③ 자활사업 지원 기반 구축

3차 기본계획 <과제 5.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 자활 지원체계(지역, 광역) 성과관리 체계 개편

- (평가 목적) 성과 측정뿐 아니라 사업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기회 확대
- (지역자활센터) '23~'26년 새로운 성과평가 지표 적용, 현행 평가시스템 대폭 개선하여 평가 객관성 담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 증빙서류 간소화, 종이문서 미제출 방안 검토, 시스템 내 정보 호환으로 입력 정보 최소화 등
- (광역자활센터) '24년부터 광역자활센터 역할 기반 새로운 평가지표 적용
 - * 정량평가 증빙서류 간소화, 정성평가 운영방식 개선(전국 순회 지양)

49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 자활 지원 인프라 간 협업체계 강화

○ 광역자활센터-개발원 간 사업 협업 체계 고도화

- * (광역자활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필요) '21년 국기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보고 검수, 제2차 기본계획 사례관리 강조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 운영 등 역할 증가, 향후 역할 증대 예상

구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사업범위	전국				광역 단위			
기능	사업* 개발 및 관리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평가 등 인프라 관리	자활 홍보 및 인식 개선	광역단위 특화 사업 추진	자활기업(사업단) 설립, 성장 지원	자산형성 현장 지원	광역단위 사례관리 지원
지원사업 역할구분	- (전국단위 사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사업, 자활인프라 구축지원, 전국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등 - (우수사례 발굴) 우수 자활기업 선정, 우수사례 지원(청년, 사례관리)				- (광역단위 사업) 지역특화사업, 시설환경개선지원, 창업자금 지원, 자활센터 시설개선 사업 지원 - (성장지원) 경영관리지원사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자활기업 전문인력지원, 광역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지원, 자산형성, 교육, 사례관리 등

50

7. 일자리사업본부 핵심추진내용

○ 촘촘한 협의체 운영으로 원활한 소통 및 사업 활성화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자활기업협회-광역자활센터협의회-개발원

4자 협의체 지속 운영으로 현장 의견 적극 수렴 (실무진 연 4회, 대표자 연 2회)

- 센터협회-개발원, 기업협회-개발원, 광역센터협의회-개발원 각각 월 정기 협의체 운영

- 4대 전국자활기업*-기업협회-개발원 등 3자 협의체 운영

*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 한구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클린쿱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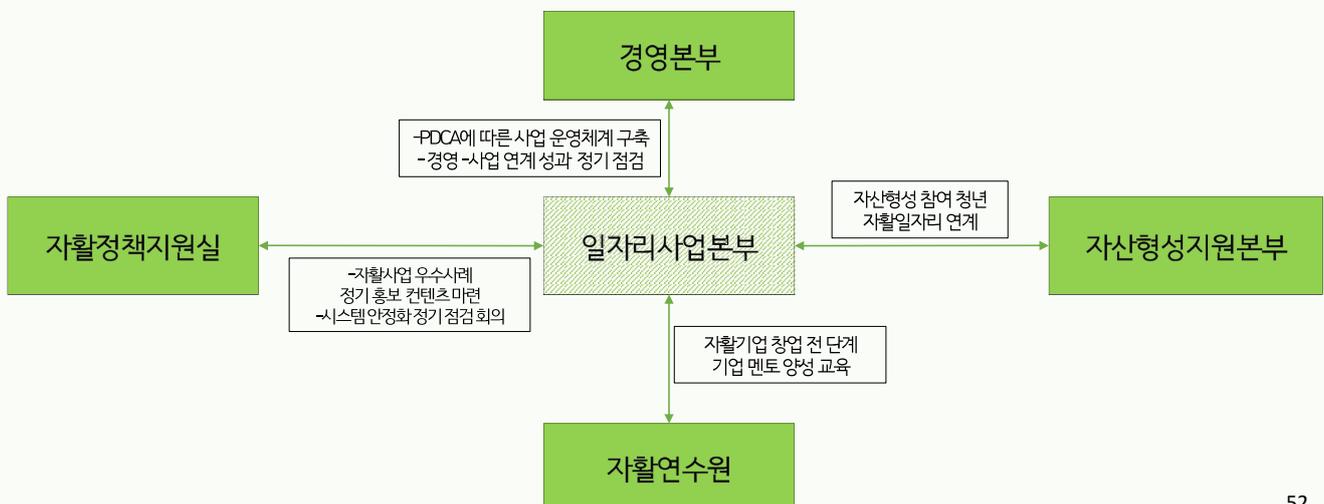
- 센터협회, 기업협회 대표자 및 실무총괄 : 개발원 이사회, 펀드관리위원회 참여

51

8. 내부 협력 강화

○ 개발원 내 본부 간 협력 강화하여 자원 한계 극복, 효율성 강화, 성과 극대화

* (예시) 일자리사업본부 중심 사업 협력 체계도



52

9. 향후 추진일정

-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23.10~11월)
 -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 '24년 사업 계획 수립
 -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등 강화 검토
- 증기펀드 운영규정 개정 등 운영체계 재정비 ('23.10~11월)
-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반영한 개발원 사업계획(안) 확정 ('23.11월)
- 자활사업 우수사례(유공자) 포상 합동 행사('23.12월)
 - * 자활유공자 표창, 우수 자활기업, 자활수기 우수사례 등
- '24년 일자리사업본부 사업 설명회 개최 ('24.1월 예정)

53

‘협력’의 방정식은?

$$1+2+3+0 = 6$$

$$1 \times 2 \times 3 \times 0 = 0$$



자활사업의 새로운 전략과 확장 가능성

제3차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이현수 전국광역자활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대전광역자활센터 센터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목 차

- 1 제2차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자활사업 성과 및 한계
- 2 최근 자활 정세 변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환경 여건
- 3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 4 자활사업 연구 및 교육인력의 확보
- 5 자활사업 종사자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 6 자활기업의 창업지원과 성장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역할 정비
- 7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10대 선결과제

1 제2차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자활사업 성과 및 한계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제주도에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여 전국 16개 광역자활 지원 인프라를 완성
2. 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의 고도화(자산형성, 교육정보 등)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광역자활센터는 아직 자활정보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어 자활 경영분석이나 기초통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 신규일자리 발굴(다회용기 세척 등)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판로개척이나 규모화를 하는 데는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장기 발전 전략과 세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더욱 필요한 현실임
4. 자활사례관리사업은 기존 90개에서 125개 확대되었으나 향후 광역단위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한 과제가 남아있고, 향후 정서적 자활의 효과로서 경제적 자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함

3

1 자활사업 성과 및 한계

5. 자활기업 지원 강화와 판로개척, 성장지원 확대, 전국 자활기업 추가설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및 서비스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아직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6.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기존 자활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고 탈수급과 탈빈곤을 위한 가능성을 높여 주었지만, 공급자 중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장사례관리 강화 사후관리와 질 관리, 자산 설계, 자립지원계획 등이 필요함
7. 중앙자산키움펀드지원사업이 광역자활센터로 일부 사업이 이관되었으나, 아직은 개발원 중심의 단순 행정 대행 업무에 머물고 있어서, 향후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자활 현장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지원체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함

4

2 최근 자활 정세 변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환경 여건

최근 자활 정세 변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근무 환경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강점 요인**으로는 제주도를 끝으로 전국 광역자치체에 16개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자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인프라를 완성**하였고, 지난 20여년 동안 **자활현장지원을 위한 풍부한 노하우와 지역사회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자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옴
2. **약점 요인**으로는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사업 운영 예산구조가 열악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인적·물적 자원의 선순환구조가 어렵고, 자활정보시스템의 접근 불가와 시설 장비의 노후화, 자활지원 서비스 최저선과 경영마케팅 인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
3. **기회 요인**으로는 중앙자산키움펀드지원사업 일부 이관에 따른 **공모제 형태의 사업예산 확보 및 자활기업육성지원** 관리를 위한 **광역자활의 역할기능의 필요성 인식, 자활통합사례관리와 현장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이관, 지역맞춤형 돌봄 사업 확대에 따른 틈새시장 연계, 취약계층의 처우개선 향상**
4. **위기 요인**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미인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근무환경의 불안정, 광역 자활 직원들의 정체성 혼돈, 자활기업 육성지원관리와 중키지원사업 이관에 따른 업무 과중 및 사업운영관리 예산 부족, 해당 분야 전문가 미배치로 인한 책임성과 효과성, 지속성 저하 우려**

5

2 최근 자활 정세 변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환경 여건

■ 최근 자활 정세 변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환경 여건 분석

강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6개 광역자활센터 간 정보공유와 연대사업 추진 2. 자활사업 현장지원을 조직체계구성과 노하우 축적 3. 광역단위 자활생태계조성,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 4. 지역사회현장과의 취약계층 일자리 네트워크구축 	약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사업 운영 예산구조 열악 2. 사회복지시설 미등록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선순환 구조 미흡 3. 자활정보시스템 접근 한계와 사무기기 및 시설 장비 노후화 4. 자활사업지원 서비스 최저선과 경영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기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자산키움펀드사업 일부 이관 및 사업예산확보 2. 자활기업육성지원 관리를 역할기능 필요성 인식 3. 자활통합사례관리, 현장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이관 4. 지역맞춤형 돌봄사업 확대와 취약계층의 처우개선 	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환경 불안정, 경력 미인정, 업무과다로 직원이직 증가 2. 자활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불가로 정보공유와 통계분석 미흡 3. 자활기업육성지원 업무 이관에 따른 해당 전문인력 미배치 4. 중키지원사업 확대로 전문인력 부족, 기관의 업무 책임 증가

6

3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1) 자활사업단 다양성 확보와 내실화

선도적 자활사업단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활사업단이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아이템 개발 및 전국 브랜드화를 통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기조로 자활사업단 역할 확보를 위한 전략** 모색

광역사업단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건 개선을 위하여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지속가능성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변화된 욕구 대응을 위하여 지역성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은 광역사업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영 필요. **광역사업단 사업관리와 관련 제도적 문제 해소 필요**

- 현황 1. 대부분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진행 중이고, 자활센터와 자활기업들이 기초지자체와 광역 단위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2. 수익성이 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사업 수준이지만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전략 1. 광역사업단 운영 주체는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자활협회 등과 협업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 광역사업을 광역자활센터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의 인정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임**

3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2) 자활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강화

(1)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단 성과지표 개발 및 주기적 관리 강화**• 통계의 연차별 관리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 계획 및 제도개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 마련 필요.

- 현황 1.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은 지역자활센터와 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된 시스템으로, 광역 자활센터 접근 불가함, 필요 시 관련정보 수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한계상황으로 기초정보 활용을 통한 데이터분석과 계획수립 곤란
- 2. 자활기업의 경우 연 2회(4월, 10월)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자활기업 초기 준비과정과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 발생

- 전략 1. 자활정보시스템 통합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광역-중앙으로 연동하여 고도화 작업추진**
광역자활센터의 정보기능은 단순한 자 수집 정도의 정보전달 역할로 초보적인 단계임
- 2. 향후 자활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개인,단체 등) 기초정보 현황 및 서비스 영역별 서비스 지원 이력 등을 상세히 입력하여, 서비스 대상(자활사업단, 자활기업 등) 1:1 현장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성장단계별 지원계획 수립 필요**
- 3. 따라서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을 자활정보통합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자활인프라 간의 정보교류 및 서비스 연계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필요**

3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 (2) 정서적 자활지표의 실질적 활용 제고와 환류를 통한 사업 고도화·자활 참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아닌, 과정 중심의 지속적인 지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강점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자활지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점수가 낮아지며, 초기상담과 교육을 통해 점수가 올라가다가 실제 업무에 참여하면서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자활의 과정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추적이 필요함.

- 현황
1. 자활사례관리사업은 초창기 사업설계과정에서 경제적 자활을 지향하며 탈수급과 매출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가 점차 자활 참여 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중점
 2. 지역자활센터의 특성상 개인의 자립지원계획 이후 자활사업단에 배치될 경우 사업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업무가 분절될 수 있으며 자활기업으로 전환된 후에는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3. 전담직원 배치 외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사업운영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매년 동일 임금으로 이직이 많고 비예산에 의한 단순 서비스 연계에 의존.

3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전략

- 전략
1. 사례관리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경력직원 확보와 정서적 자활 지원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기준선 마련과 적정 수준의 서비스 예산 확보가 필수
 2. 광역 단위 자활사례관리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문제 유형에 따른 솔루션 회의와 매뉴얼을 통해 대상별, 유형별 (개인 및 가족지원, 긴급·위기 지원, 일시·연간 지원), 내용별(심리정서문제, 알콜, 우울증, 약물, 가족갈등, 부채, 대인 관계, 사업단 동료와의 갈등 등) 신속한 욕구문제 파악과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를 위해 16개 광역자활센터에 슈퍼바이저 배치 필요
 3. 자활 참여자 사례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복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서비스 모델인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을 자활 실천현장과 사업장에 적절히 활용할 필요(예를 들어 근로자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 가족 관련 문제,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원)
 4. 또한 기존 개인 중심 사례관리를 벗어나 빈곤가구의 가족문제와 사업단에서 동료관계와 갈등 해소, 지역사회관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과 사업장 조직의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기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교대 일정, 업무 분담, 운영규칙, 근무 환경, 동료관계 갈등, 조직의 하위문화, 직무 및 동료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역동성 측면을 파악하고 개입, 관련 제도와 법 활용

4 자활사업 연구 및 교육인력의 확보

자활사업의 과학적, 체계적 운영과 성과측정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자활 지원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및 실무 경험의 체계적 축적을 위하여 교육개발 및 평가, 교육 콘텐츠 생산, 교육컨설팅 인력확보가 필요함

- 현황 1. 광역자활센터 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활사업 연구활동이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 예산이 매우 적고, 전문가 인력 풀이 부족하여 연구용역추진 곤란
- 2. 자활참여주민과 종사자를 위한 업종별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전문 강사 풀이 부족한 실정임
- 3. 자활참여주민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개별 센터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지표에 따른 교육내용과 특히 자격증 취득과정을 선호

4 자활사업 연구 및 교육인력의 확보

- 전략 1.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자활 정세 변화와 정책 이슈, 자활현장에서의 이슈와 의제를 발굴하고, 광역단위 자활 현장 사례연구와 정책 공감을 위한 대안 중심의 정책포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광역단위 정책포럼구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활전문가 및 핵심 인물들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연구자 풀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자활 관련 정책·사업·교육분야 이슈 파악, 통계분석, 기초조사, 대안마련, 여론형성, 16개 광역 자활센터와 협회를 통한 지역화 전략과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자활지원 인프라의 정책적 역량 강화)
- 2. 한국자활연수원과 16개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프라 간 교육지원업무 영역과 역할 기능을 명확히 하고, NCS에 기반한 자활에 적합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 등을 고도화하고 전문 강사 풀을 공유하며, 교육내용과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주체를 선정하고 명확한 업무 분담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한국자활연수원에 는 3년 단위로 전국 자활 인프라 지원조직 및 자활 현장 주민, 자활기업, 자활사업 관계자(공공기관 담당자 포함)의 자활 교육 기초수요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자활 교육 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 16개 광역의 교육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와 교육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교육 기회 제공 필요
- 4. 특히 업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자격증 취득과정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체계와 1:1 맞춤형 도제식 교육(우수자활사업 현장연계를 통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

5 자활사업 종사자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 현황 1. 중앙키움펀드지원사업의 경우 광역자활센터 본 사업예산보다 사업운영비가 약10배 정도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센터별 비정규직 1명이 전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2. 자활기업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광역자활센터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별도 사업 운영비와 전담 인력 또는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음

- 전략 1. 중앙키움펀드지원사업은 기존 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광역자활센터와 자활협회가 함께 자활사업의 지역화 실천을 위한 플랫폼 역할과 협업 강화**
2.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장 중심(바텀업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광역자활의 책무를 강화하며, 16개 광역에 기존 중기전담 관리자 외에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지원에 필요한 경영지도사 또는 창업지도사(창업매니저) 추가 배치를 통해 자활사업 지원의 전문화와 서비스 질 강화**

6 자활기업의 창업지원과 성장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역할 정비

예비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창업 시 지나치게 영세한 형태로 창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기업의 성장과 성숙 과정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만큼, 창업 단계에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인큐베이팅의 과정이 필요함. 자활기업의 창업 이후 관리는 광역자활센터에서 맡고 있으나 자활기업의 창업 전 단계 에는 제한적인 역할임. 광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창업 직전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함.

- 현황 1. 자활기업은 설립 초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설계하고 성장 관리하는 과정에서 광역자활센터가 협력 지원하는 형태이며, 기업 설립 후 광역자활센터로 업무 이관
2. 인적 구성의 한계로 현장 활동 이외에 사무 행정 및 홍보마케팅 업무 등에 어려움
3. 개별 자활기업 위주로 전문가를 우선 배치하다 보니 각종 업종별 네트워크 활동과 광역 기업화 및 사업규모화를 위한 협의 조정, 전문적인 기획·중재자 역할 부재

6 자활기업의 창업지원과 성장관리를 위한 지원조직 역할 정비

- 전략 1. 자활기업 설립 전 초기 설계 및 단계별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16개 광역자활센터에 해당 전문가인 창업지도사나 경영지도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활기업육성 업무와 슈퍼비전, 전문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의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매출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 따라서 자활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와 규모화, 광역화 작업 필요
2. 자활기업 창업 경로에서 광역자활센터 책무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존 단순 지원업무를 탈피, 사업 설계를 위한 준비 과정과 시장조사, 단계별 교육과정, 성장전략계획수립, 경영 솔루션 회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반 조성, ESG 경영실천활동 지원
3. 이를 위해서는 지역 규모에 따라 16개 광역자활센터에 2~3명씩 해당 전문가를 배치하고, 경영지원 기초 요 파악과 기업진단, 성장 단계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업종별 규모화, 신사업 개발, 판로개척, 품질향상, 경영기술지도 등 필요. 이때 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기초수요조사와 정보공유, 업종별 공동브랜드화, 전자결재시스템과 공공영역 틈새시장 및 판로개척, 자활기업의 이미지광고 필요*

7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10대 선결과제

1. 자활 전달체계 및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조직진단과 직무체계 분석을 통해 역할재정립 필요
2. 자활 현장의 욕구 문제파악과 고도화 작업을 통하여 현장 중심(바텀업 방식)의 인프라 기능 강화
3. 자활 지원조직의 서비스 기준선 마련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세목별 적정수준의 사업예산 확보
4. 자활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 지원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사업과 서비스 연계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며, 전국 지자체에 자활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 필요
5. 자활사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상품광고를 통한 판로 확대
6. 경영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추가 배치 및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 분리 지원의 필요성 검토 필요
7.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역단위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정보공유, 각종 전문위원회 구성, 16개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경영전문가 멘토(프라보노) 위촉 및 시민 자활 서포터즈 확대

7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활사업 인프라 조직의 기능 강화를 위한 10대 선결과제

8. 자활사업의 현안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활지원인프라(자활복지개발원,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들의 다자간 자활공동선언문 채택과 비전수립,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
9. 자활 지원 인프라의 체계적인 정책수행과 사업추진을 위해 가칭)한국자활포럼을 구성하고, 앞서 공동선언에 따른 각종 과제에 대한 상호협력과 연대사업 필요
10. 이러한 공동선언과 연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활포럼 연합사무소 설치 및 16개 광역자활사업 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자활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지역화 전략을 완성시킬 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¹⁾

2023년 10월 20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이문수

1) 이 글은 제3차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국협회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필자가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힙니다.

- 1 -

I 자활사업에 대한 진단과 고찰

□ 근로미약자가 다수인 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에 **근로미약자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미비
- * 참여자 전체 자활역량 평균 점수는 56.8점이며, 59점 이하가 61.9%에 달함(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2).
- * 자활사업 참여자 2021년도 자활역량 평균 점수는 56.4점에 그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자활사업 정책목표 이원화 및 자활프로그램 다변화 추진 미흡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언급은 되어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업이 부재함.
- **근로미약과 복합적 문제를 가진 참여자와 취,창업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목표간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못함.

□ 자활사업 지원조직간 위상과 역할이 불명확하여 유기적인 사업지원 연계 미비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원-광역자활-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함.
- 기타 공공기관인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재설계 필요.
- 특히 **자활복지개발원은 총괄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운영구조와 사업체계 형성** 필요.

- 2 -

□ **자활현장의 취약선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불안정의 지속적 상존.**

- 센터 **운영보조금의 예산 제약***으로 걱정된 인력운영과 기초적인 운영경비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됨.
- * 센터 운영보조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6.5%에 달함(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3)

□ **자활사업 성과의 중요한 한 축인 자활기업 수의 감소 추세에 대한 개선 미흡**

- 자활사업 활성화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자활기업의 창업**을 통한 **자립유인은 악화*** 추세 지속
- * 자활기업 창업 수 감소 추세 : ('16) 130개 → ('19) 92개 → ('21) 72개 → ('22) 84개

□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확대에 따른 자활사업 확대의 사회적 필요성 대두**

-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 취업취약계층 등 **경기침체에 빈곤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자 상존** 우려
- 생계급여 수급 기준의 점진적 확대('24년, 중위소득의 32%)로 인한 **수급자 수 증가추세 수년간 지속** 예상
- 이는 **자활일자리의 확대 필요성**과 **빈곤진입 예방**을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위상**이 높아질 개연성 존재

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일자리) 확대 방향과 전략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확대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방향**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제도적 장애요인 점검**(예:조건부과유예 등)
- 자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 및 정부 차원의 대국민 자활사업 홍보 정례화 : **사회적인식** 제고
- **근로능력판정체계의 단계적 개편 추진** - 실제적으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기조** 정립

②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유인 방향**

- 사각지대와 빈곤위험계층의 감소 위해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 **참여대상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포괄**
- 프로그램 다양화로 저소득청년, 장기실업자 등 **비수급 취업취약계층까지 자활사업 참여대상**으로 확대
- 취업취약계층 등 **정책대상의 욕구**에 따른 **자활사업 추진* 및 운영체계**** 마련
 - * 특화된 자활사업 모델개발(개발원)→참여기관 공모(광역자활)→ 모델선택 및 자율적 사업수행(지역자활센터)
 - ** 최저임금 수준의 자활급여 제공, 인센티브 및 사업단 운영 사업비 비율 확대와 자율성 강화 등

3 자활사업 정책목표 이원화(다변화)의 방향과 전략

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와 정책목표간 불일치 해소 중점과제 설정 : 사회통합 기능의 강화를 토대로....

- 경제적 자립 목표만이 아닌 심리, 정서, 사회적변화와 역량증진까지 포함하는 정책목표 이원화 방향 설계.
 - 근로미약자가 다수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속되는 것은 자활사업의 정체성 정립에 위헌신호일 수 있음.
 - 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의 역할과 기능 재편 및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경로 설정 필요.
 - 이원화는 사회통합 기초로 참여자의 사회적 인적자본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위상의 강화라는 설계 필요.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회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복지로서의 일자리 제공 관점 형성.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편* 및 확대
- * 자활사례관리기관, 사회통합일자리 전문기관, 취·창업지원센터 등으로서의 복합적, 전문적 기능 수행

② 자활사업의 빈곤예방 체계 구축과 정책목표 이원화(다변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취업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참여유인 프로그램 개발 : 대상자와 프로그램의 변화, 동반 추진
- 사회통합과 빈곤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편, 다양한 인센티브, 사업운영의 자율성 강화 필요
- 대상자 및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목표 이원화 등을 위해 민·관·학 정책 협의기구 정례화로 제도변화 추진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유인을 위한 근로능력평가 체계 재정비 및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의 개념 제정의
 - 자활인프라의 역할 재정립과 자활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구조 개편 검토 및 자활기금 등의 기능 재편

- 5 -

4 자활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자활인프라의 역할 재편의 방향과 전략

① 자활사업 총괄 지원조직으로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위상과 역할 개편

- 매년 당해연도 ‘자활사업 종합 지원계획’ 수립으로 총괄 지원조직으로서 체계적인 자활사업 지원방안* 마련
 - * 매년 초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의 구체적 지원사업의 정책적 방향과 추진계획 발표
- 사회적, 정책적 환경과 근로연계복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활근로사업의 현황 진단 데이터 구축과 실행 가능한 신규 자활근로사업의 개발, 보급 및 연계·확산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적일자리, 보호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활사업 연계 일자리 개발·보급
- 중앙자산키움펀드 공모 운영방식 개편과 성과평가 업무방식 개편으로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 고취
 - 중앙자산키움펀드를 공모 방식과 지원사업 개발을 포함한 지원 방식도 병행하는 유연한 운영방식* 필요
 - * 공모는 심사와 평가를 동반함. 이에 대한 자활현장의 불만 해소방안 필요(예:사업별, 사안별 일정비율 일괄지원 등)
 - 성과평가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개발원의 운영구조는 열악, 자활현장 중심의 효과적 운영구조로 개편 필요
- 자활사업 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른 프로그램과 제도변화 등 선제적 정책 대응 강화
 - 자활사업의 현황 분석과 사회적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 내용 정례적 개발 및 전국적 홍보 운영
 - 자활사업 정책적 동향과 시사점있는 정책 사례 등 정례적 발굴, 보급과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

- 6 -

-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 정립**
 - 자활사업 운영(경영,생산,재무등), 노무, 세무, 회계, 법률, 행정 등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 및 연계체계 구축
- **자활기업 총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강화** - 광역자활센터와 연계 운영
 - **자활기업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매년 수립** 및 이의 실행과정에서 광역자활센터와 협업 체계 구축
 - 자활기업 생태계 구축 및 내부유통망 개발,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모델 발굴 등으로 자활기업 규모화 지원
- 교육사업 지원은 인적자본 향상 그리고 정책방향을 고려한 전문성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효율적 추진**
 - 대상자에 맞는 분야별 **교육과정의 전문적 운영**과 사회적, 정책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고 보급**하는 사업운영 효율적 추진
 - 자활연수원 - 광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간 교육사업 수행의 **현장중심 업무분장의 체계화 구축**
- **현행 자산형성지원센터 사업**을 개발원 산하에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추진**
 - **개발원은 자활사업 지원업무에 집중토록 개편**하고, **자산형성사업은 부설기관 설치**로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
 - **부설기관 예산의 독립적 운영**으로 개발원의 자활사업 지원예산*과 분리, 운영
 - * 자활복지개발원의 일반예산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형적임.
- **자활사업 총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로 작용하는 **개발원의 인적구조 개편**
 - 현재 자활복지개발원의 인적 구조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을 이행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구조임.
 - 기타 공공기관이면서 **총괄 지원조직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 인력증원**을 통한 운영체계 개편

㉔ 자활사업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광역자활센터의 위상과 역할 제고

- 개발원의 자활사업 개발과 더불어 광역단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개발원에서 개발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광역단위에서 보급,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정례적인 **자활사업 운영현황 진단, 점검**을 통해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계, 모색** 추진
 - 지역의 환경변화 등과 **공공과 민간영역의 연계사업 가능성 등 진단 상시화**로 자활근로사업 개발, 보급
- **자활기업의 광역단위 총괄 지원조직**으로서 개발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 수행
 - 한계는 있으나 광역자활센터 조직체계에서 **자활기업 지원을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의 조직개편** 논의 필요
 -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창업단계부터 지원역할을 기반으로 성장단계별까지 지원역할 세분화**하여 정립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운영 현황에 대한 **상시적 데이터 마련 및 활성화 방향 제시**
 - 신규 자활사업 개발과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지원등을 위해서라도 자활사업에 대한 현황진단 상시화 필요
- 자활사업 네트워크 참여와 지원 및 **광역자활근로, 광역자활기업 개발과 운영 지원**
 - **상시적 현황진단과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등을 기초로 **광역단위 자활사업 운영 자체 로드맵** 구축
- 자활복지개발원 - 광역자활센터의 조직구조를 **자활사업 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조직체계 운영으로 개편**
 - **16개 광역자활센터의 조직체계*와 사업의 지향점이 모두 다름.** 향후 조직체계와 지원사업의 유사성 고취
 - * 부서명칭이 모두 다르고 운영방식과 부서개수도 다름. 한편 자활기업 지원을 부서명칭으로 한 곳은 2곳에 불과.
 - 조직체계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센터 운영과 사업지원에 대한 표준 운영매뉴얼** 제작 논의 필요.

- 자활사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로 작용하는 **운영예산과 인적구조 확대 개편**
 - 광역자활센터가 위에서 언급되어진 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현재 인력과 예산이 한계로 작용함.
 - **광역자활센터의 예산과 인력의 확대 추진 필요**,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과 업무의 집중과 선택의 개편 필요**

③ 일차적인 자활사업 지원과 자활사업 실행 주체로서의 지역자활센터의 위상 강화

- 효과적이고 질 좋은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및 실행
 - * 개발원과 한국협회가 주관, 기초 지원단위로서의 특성과 사례관리 중심체계를 고려한 운영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방식 개선***으로 민,관의 책임성 강화
 - * **(현행)** 4년간 자활사업 성과평가 60점 미만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 **(변경)** 등급을 구분하고 하위등급의 경우 사업수행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전환
- **운영보조금 지원방식 변경*** 및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자활센터 운영안정화, 자활지원서비스 지원역량 강화
 - * 운영보조금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항목별 운영보조금 지원(인건비 대 기관운영비: 85:15로 점진적 개선)
 - ** 사회복지공무원 급여의 95%이상으로 봉급월액표 변경, 계약직 종사자 정원표에 기재 및 단계적 통합급여체계 마련
- 지역사회와 연계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활사업 운영**과 **자활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제공*** 등의 효과적인 인 운영으로 **자활사업의 사회적인식 고양**** 지속 추진
 - * 지역내 공공과 민간기관과 연계한 사업운영 그리고 환경, 자원순환, 복지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자활서비스 운영**
 - ** **지역의 기관, 주민들의 인식 제고 - 사회적위상 강화(홍보) - 센터운영, 처우개선 및 자활사업 성장의 순환구조 형성**

- 자활사업 확대와 사회적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인프라 구축***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 지역자활센터 전체 단계적 시설확보 방안 마련 및 참여자 과밀지역의 경우 신규 센터 또는 분소 설치·운영 등
 - ** 업무과중 해소를 통한 효율적 자활지원서비스 수행을 위해 참여자 수에 따른 종사자 수의 지원방안(예:센터당 평균 2.18명 추가 필요/2022,정은희 외) 마련 단계적 추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운영에서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위원회에 대폭 이양**하고 자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민-관 협력관계의 건강한 지배구조로 개편!!
- **빈곤예방(매출지향)과 사회가치적 자활사업 운영**을 지향하여 **자활사업 정책목표 이원화(다변화)의 토대** 마련
 - 센터 운영은 **사례관리를 축으로 사회통합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지향적인 사업과 사회적의미를 고양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 개편** 노력
- **자활사업의 유의미성**에 대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홍보사업 전개**로 자활사업 인식 제고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자활사업 홍보 지속 운영(개발원, 광역자활과 연계 운영)

5 정책목표 이원화(다변화)와 수요자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개편 방향과 전략

11 자활사례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프로그램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화

- 지역자활센터 조직과 운영체계가 **자활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편 필요
 - 자활사례관리는 센터장을 주축으로 자활사업 입문과 종료 전 과정에서 지속적, 일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자활사례관리는 일차적으로 **모든 참여자의 역량 진단 및 임파워먼트 강화 목표에 따라 지원**
 - 효율적 사례관리를 위해 전체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배치** : 단계적으로 참여자 규모에 따라 1~2인 배치
-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에 맞는 **사회적 유용 노동, 참여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일자리의 발굴과 개발** 필요
 - 자활사업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노동**은 직업능력, 업무능력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회적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노동이 병행**되는 것을 의미
 -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 환경, 자원순환, 복지서비스 등 분야별 사회적 유용 노동 발굴 및 전국적 확산
- **(사회적용 프로그램) 근로미약자 대상으로 심리·재활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자활근로사업** 운영
 - 자활역량평가 근로미약자 대상으로 **근로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정서적 치유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근로유지형 형태의 사업운영 가능,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

- 11 -

-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맞춤형 자활역량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역량강화)** 자활역량평가와 욕구를 고려 **대인관계 - 사회관계 - 직업역량 강화***로 단계적 설정.
 - * **대인관계 강화**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역량 강화**에 초점, 사회적유용 사업단 참여 및 효능감 고취
 - 사회관계 강화** -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지역사회 관계 강화**가 목표, 참여주민의 주도성 강화 및 공동체성 강화, 환경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회적유용 사업단 참여
 - 직업역량 강화** - 자활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관계망 확대 및 취,창업 역량 강화**, 직무교육과 자격증 취득 및 경제적 자활준비등 시장진입형 형태 사업 참여, **농촌형은 제외 또는 비중감소**
 - **(사회통합 성과지표)** 각 단계별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및 긍정적 변화**(자활사업 참여정도, 관계 역량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자활사업 **평가체계 개편, 운영**
- **(빈곤예방 프로그램)** 자활역량평가 및 역량강화에 따른 **참여와 빈곤진입 예방**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자활역량평가와 참여주민의 **욕구(IAP 경로설정)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직업훈련)과 체험** 등 취, 창업을 지원
 - 대상자 확대를 위해 비수급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빈곤진입 예방 및 자립기회 제공
 - 자활근로사업에서 인턴형, 시장진입형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자활급여 인상* 등 보상체계 재정비**
 - * 보다 차별화된 자활급여 인상 추진 및 비수급 취약계층 최저임금 기준 급여 설계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 유인
- **농·어촌 유형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경제 등을 감안, **종합일자리 복지기관**으로서 기능 차별화
 - 도시와는 다르게 자활근로사업 운영방식 차등화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구조 개편의 단계적 추진

- 12 -

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평가와 정책목표의 이원화(다변화) 추진

- 자활사업 평가운영에 있어서 **정서적 사회통합지표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지표의 연계, 재정리**로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자활사업에 맞는 성과평가 운영으로의 개편 추진
 - '2022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역량평가 평균 점수는 60.25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2)
- 자활사업은 결국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기반이어야 하므로 노동과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자의 정서적인 변화와 성장(긍정적 변화)을 제고하는 정도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추진
 - 참여자의 자활역량 평균 점수는 56.86점, 59점 이하 참여자는 61.9%에 달함(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2)
- **60세이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고립감 해소, 사회적유용 노동으로 **소득보전을 통해 빈곤심화를 예방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고연령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 추진
- 확일적 성과평가에서 사회통합과 빈곤예방 자활사업 **각 프로그램 유형**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 정서적 지표를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참여자 역량증진, 긍정적 변화, 상위단계로의 전환 등 사회통합 자활근로사업 유형에 맞는 성과평가지표로** 개편하여 운영
 - 참여자 역량증진, 직업훈련 과정 수행 등 **노력정도, 취,창업**을 위한 노력과 달성 등 빈곤예방 자활근로사업 유형에 맞는 **성과평가지표로** 개편하여 운영
- 자활사업의 **정책방향, 사회적 가치와 의미, 사회적 유용성 및 자활대상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정례적 추진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 13 -

③ 정책목표 이원화(다변화)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방식 개편

- 자활프로그램별 참여기간을 달리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상위 단계로의 진입을 성과로 설정하고 보호된 일자리로서의 성격 강화로 **참여기간 폐지를 세분화하여 검토**하고, 빈곤예방 프로그램은 현행 참여기간 유지
- 이원화의 방향은 자활역량평가 등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자활사업에 배치**하고, **참여자의 성장과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이므로 사업단 구분의 기준인 **매출요건은 폐지가 적정**.
 - 사회통합과 빈곤예방 **자활근로 사업단의 구분은 자활역량평가 점수를 기본**으로 함.
 - 참여자의 변화 및 역량 증진과 상위단계로의 전환을 성과목표로 개편하는 것이므로 현행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단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 하지 않음.
- 자활근로사업비 운영에서 사회통합과 빈곤예방 프로그램의 비중을 달리하더라도 **인건비 대 사업비 비율을 폐지**하고 **참여자 1인당 경비(인건비+사업비+운영비)로 산정**하여 통합 운영 추진
-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을 통한 성과달성의 효과성을 위해 참여자의 역량 증진, 상위단계로의 전환 등 성과목표 달성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사업지원비를 활용하여 인센티브** 자율적 지급
- 현행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한 자활사업의 지침**을 자활사업 운영원칙 및 유형별 목적사업 범주설정 등으로 내용을 축소하고, 사업수행에 대해 확인, 점검하는 **'사후 관리' 형태로 지침의 기능 개편** 추진

- 14 -

6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내실화의 방향과 전략

① 자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

- 자활기업 지원조직(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자활기업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의 평가체계 구축 및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등 진행
- 자활기업 사회적위상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척도 마련 및 적용 추진

②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성장단계별 지원 내실화

-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및 자활기업의 공공재적 성격 강화
- 자활사업의 공공일자리형 업종별 모델링* 및 직업역량 개발지원**으로 자활기업 창업 활성화
 - * 환경부 자원순환, 국토부 주거복지, 복지부 사회서비스 등 공공일자리형 창업 업종 집중 개발
 - ** 유형별, 업종별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및 분야별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 자활기업 창업 기여단위에 대해 인센티브(축하성공금)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시 참여자,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에 대해 3개월 또는 일시불 등 인센티브의 다양한 지급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 5 -

- 창업초기(3년 이내)-안정기(3년-7년)-성장기(7년 이상) 등 성장 단계별 자활기업 육성·지원
 - 성장단계별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내용의 차별화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 유도 및 지속운영 지원
- 경영위기 자활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 상시적인 신청에 의해 폐업위기에 직면한 자활기업에 대한 컨설팅, 자금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

③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및 자활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고취

-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체계 개편으로 상설적 지원체계 마련
 - 지역단위 자산화사업과 연계, 규모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운영지원으로 광역, 전국자활기업 창업 연계
 - 소셜 프랜차이즈, 플랫폼 노동, 환경과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 지향 업종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자활기업 지원 특정항목 지출 활성화*로 자활기업 지원 내실화
 - * 4대 보험료 지원,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사회적기업 지원에 준하는 자활기업 지원
- 자활복지개발원 내 자활기업 경영지원단 구성으로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 확장
 - 광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기업 규모화 추진, 업종별 부가사업, 추가사업 등 지속적 개발·보급
 - 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정부 부처 공공시장 개발 및 사업연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6 -

